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6

June 2015 vol.123



이달의 이슈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 고용-산업-복지 연계 유형화에 따른 서울시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생생리포트

서울의 고용 동향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은?



경제동향

요약/생산/ 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통통

FOCUS/ZOOM IN/HOT ISSUE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경제

발행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연구책임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장윤선 (연구원), 정의영 (연구원)

편집위원 서울연구원

최봉 (연구원), 김범식 (연구원), 김묵한 (연구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이해우 (과장), 김선수 (팀장), 나성조 (주무관)

발행일 매월 말

발행처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소 (우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3

팩스 (02)2149-1289

홈페이지 www.si.re.kr

*본 간행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이슈

- 06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센터장)
- 12 고용-산업-복지 연계 유형화에 따른
서울시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생생리포트

- 20 서울의 고용 동향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의영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장윤선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인포그래픽스

- 44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은?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선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동향

- 50 요약
 - 51 생산
 - 53 소비
 - 54 고용
 - 57 물가
 - 58 부동산
 - 60 금융
 - 65 수출입
- 장윤선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정의영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통통

- 72 FOCUS / ZOOM IN / HOT ISSUE
김가영 (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이달의 이슈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장
jumuhyun@chol.com

고용-산업-복지 연계 유형화에 따른
서울시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slim@hanyang.ac.kr

이달의 이슈 101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주 무 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센터장
jumuhyun@chol.com

1. 심각한 지역
일자리 문제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 문제이다. 일찌감치 퇴직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적당한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퇴직금으로 창업에 도전하였다가 정보 부족과 경영 미숙으로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결혼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던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은 일부 서비스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졸업 대신 휴학을 선택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지역 사회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구직 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 사회의 미래는 더욱 우울해지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일자리 불균형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노동시장은 수출부문 대기업과 내수부문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지역화(localization)되는 과정에서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부문 대기업 일자리는 고용안정성, 고임금, 높은 기업복지를 특징으로 하면서 수도권 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내수부문 및 부품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
- 최근 연구: 재정지원 일자리 고용효과성 성과 평가(2013), A Study of the Effect of an Attractive Policy Instrument on Employment(2013) 등

제조부문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고용안정성이 취약하고, 저임금과 낮은 기업복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층적·위계적 고용구조가 지역 노동시장에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일자리창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지금도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은 물론이고 모든 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일자리사업에 14조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자리사업의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은 여전히 개선 정도가 미약하고, 지역별 고용격차도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도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지역 고용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여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성과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과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2014년 일자리사업 예산 9조 6,633억 원 중 지자체 직접 출연 예산은 2조 원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¹한다.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출연이 이루어지는 매칭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4년 총 3조 3,034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조 1,673억 원과 1조 1,361억 원씩을 투입하고 있다. 매칭 일자리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조달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편,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체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표 1>에서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연간 8,6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일자리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한시적·임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소진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¹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예산 4조 3천억 원은 제외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업무는 자치단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예산을 포함하면, 2014년 일자리사업 예산 총액은 14조 원이 된다.

〈표 1〉 일자리사업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2014년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중앙정부		자치단체		합계
	단독사업	매칭사업	자체사업		
직접 일자리	7,962	20,486	11,087	6,198	45,733
	(17.3)	(44.8)	(24.2)	(13.6)	(47.3)
직업훈련	15,604	213	4	597	16,418
	(96.3)	(1.3)	(0.0)	(3.6)	(17.0)
고용 서비스	4,536	1,370	238	385	6,529
	(69.5)	(21.0)	(3.6)	(5.9)	(6.8)
고용 장려금	20,845	—	—	605	21,450
	(97.2)	—	—	(2.8)	(22.2)
창업지원	5,570	—	—	902	6,472
	(86.1)	—	—	(13.9)	(6.7)
소계	54,517	21,673	11,361	8,686	
	(52.4)	(24.1)	(12.0)	(11.6)	
매칭사업		33,034			96,602
		(34.2)			(100.0)
중앙정부 자치단체	76,586		20,047		
	(79.3)		(20.7)		

주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예산은 제외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서 인용.

2014년 지자체의 자체 일자리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두 2,000개 이상 추진되었다. 이 중 직접일자리사업이 75.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가 각각 8.8%와 8.3%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직접일자리사업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공공근로사업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직업훈련도 고용노동부에 의해 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역 노동시장의 인력수급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일자리센터가 운영되어 지역주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고용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표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일자리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연도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직접 일자리	합계
2012	158	105	89	26	714	1,092
	(14.5)	(9.6)	(8.2)	(2.4)	(65.4)	(100.0)
2013	192	128	30	109	959	1,418
	(13.5)	(9.0)	(2.1)	(7.7)	(67.6)	(100.0)
2014	175	184	57	95	1,588	2,099
	(8.3)	(8.8)	(2.7)	(4.5)	(75.7)	(10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표 3〉 지방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의 유형별·시도별 개수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 %]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합계
서울	274	36	28	15	27	380
	(72.1)	(9.5)	(7.4)	(3.9)	(7.1)	(100.0)
부산	89	18	9	1	3	120
	(74.2)	(15.0)	(7.5)	(0.8)	(2.5)	(100.0)
대구	26	5	13	1	6	51
	(51.0)	(9.8)	(25.5)	(2.0)	(11.8)	(100.0)
인천	14	0	0	1	0	15
	(93.3)	(0.0)	(0.0)	(6.7)	(0.0)	(100.0)

주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표 3〉을 보면 2013년 기준 인천시 지역 고용정책의 거의 전부가 직접일자리사업이다. 대구는 전체 일자리사업 51개 가운데 직접일자리사업이 절반을 차지하며 고용서비스 사업은 13개를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380개의 자체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72.1%에 달하는데, 서울시 역시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고용정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일자리사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의 지역 고용정책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창출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3. 지역 고용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지역 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제약이 많다. 따라서 지역 고용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와 기관장에게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그나마 주어진 예산을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창출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으며, 직접일자리사업 이외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공급자(중앙정부) 중심 전달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인력수급구조에 적합한 취업 취약계층 친화적인 일자리사업과 전달체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기획·총괄 기능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자체 일자리사업 부서는 중앙부처에서 받은 예산을 단순 집행하거나 일자리사업 실적을 취합·보고하는 제한적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이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 일자리사업이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겹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지자체 일자리사업이 지역 산업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기획·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통합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사실상 광역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역 고용심의회 의 조정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예컨대 2011년 이후 서울시는 지역고용심의회를 노사민정 협의회로 대체하였으나 이후 일자리창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고용지청 등)와 자치단체별 집행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또한 취약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지역 고용정책의 성과가 좌우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기관장이 일자리사업 또는 고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사업 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고 독려하는 지자체는 고용정책에서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장이 지역의 산업 성장만이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낡은’ 신념을 갖고 있을 경우 지역 고용정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

한편, 지자체 일자리사업 평가는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지자체 일자리사업 예산 및 규모 조정은 사업 평가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일자리사업의 고용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고용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다. 지역 고용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 전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고용정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청년 고용사업은 대다수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차별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과 대구시 기업인턴 등 자치단체의 청년인턴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밀착형 고용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따라 지자체 행정조직이 편제돼 있어 일자리사업과 무관한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일자리센터가 일자리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업상담사의 고용안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은 대부분 민간위탁업체의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의 전문성이 장기적으로 축적,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자리센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역 고용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과 조정에 대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지자체는 지역 일자리사업의 예산 편성과 운영방식을 더욱 유연하게 하여, 고용 창출 및 고용서비스 기능이 낮은 일자리사업의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해야만 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고용 업무 전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고용-복지 업무가 중앙 부처의 단순 위임사무에서 벗어나 전문적 업무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 역량 향상 교육은 아직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 전략산업과 결합한 내생적 고용발전 구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지역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여 산업정책과 일자리사업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산업-고용정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역 내 고용발전 구조전략 수립과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지역 전략산업과 결합한 내생적 고용발전 모델을 잘 구축해나가기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

4. 향후 과제와 시사점

이달의 이슈 102

고용-산업-복지 연계 유형화에 따른
서울시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임 상 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slim@hanyang.ac.kr

1. 들어가며

지역 고용거버넌스란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협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서울시는 현재 지역 고용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여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타 지역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고용거버넌스 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고용거버넌스 기구는 서울시에 없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니 여기에 통합된 지역 고용심의회도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서울시의 각종 사회주체들이 일자리 창출과 구직/구인 미스매치(부조화) 해소,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등 각종 고용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가 없음을 뜻한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나 지역 고용심의회가 아닌 실질적인 고용거버넌스 기구가 있을까? 대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부시장이 참여하는 고용거버넌스

기구는 없다. 또한 경제진흥본부장 혹은 그 밑의 일자리기획단,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지역의 사회주체들이 고용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각종 고용 관련 정책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누군가 일회성의 노사민정 모임이나 행사, 혹은 과나 팀 차원의 정책사업 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지역 고용거버넌스 기구라고 주장한다면 번지수를 완전히 잘 못 짚은 것이다.

이 글은 서울시가 지역 고용거버넌스 수립의 후발 주자로서 좀 더 현명하게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에 나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서울시는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노사단체와 더불어 올해부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합 고용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 형식적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와 환경, 그리고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고용-산업-복지
연계를 고려한
지역 유형화와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고용의 관점에서 보면 다들 똑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처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광주가 서로 다르고, 광역도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가 같은 처지가 아니기에 외형상 동일한 고용거버넌스 기구라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주체나 논의 의제, 그리고 정책사업의 실행 방식이 달라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7개 광역 지자체를 고용 중심으로 이분화하면 고용과 산업이 연계된 지역과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그리고 고용구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경제와 고용에서 특별한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 업종 비중이 골고루 분포되는 지역이 있다.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지역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
- 지역 고용거버넌스 실행전략(II) (2015), 일자리 사업 전달체계 및 평가체계 연구(2012), 지역 고용 노사정파트너십 현황과 발전방안(2011)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 중에서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의 매출액과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고용이 산업과 연계되는 경향이 높아 고용-산업 연계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용이 복지와 연계되는 경향이 높아 고용-복지 연계형의 특징을 가진 지역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전자의 세 가지 업종은 매출액과 종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근로조건도 상대적으로 좋은 사업체가 주력인 반면, 후자의 세 가지 업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근로조건도 열악한 사업체가 주력이다. 이는 전자의 세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 산업,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고용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용정책 사업을 운영할 때 고용과 산업의 연계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후자의 세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고용과 복지 연계를 중심으로 지역 고용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지역 고용정책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를 두고 제조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해볼 때 서울은 울산, 대전, 충남, 경북 등과 함께 고용과 산업의 연계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보건·사회복지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해보면, 부산, 강원, 제주 등이 고용과 복지 연계 특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산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전국 최고이며, 강원은 숙박음식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비중이 전국 최고였다. 제주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보건·사회복지업 등 세 업종 모두에서 전국 최고의 비중을 보였다.

서울의 고용-산업 연계형 특징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광역 지자체를 분류해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드러났다. 먼저,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은 고용과 산업 연계 지역으로 분류된 울산, 대전, 충남, 경북 등과 함께 전국 평균보다 많은 평균 종업원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과 복지 연계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역 지자체 종업원 중 여성 비중이 높을 경우 고용과 복지 연계 유형 특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여성 종업원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도 고용과 산업 연계 혹은 고용과 복지 연계 유형을 분류하는 데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은 앞에서 고용과 산업 연계 지역으로 분류한 울산, 대전, 충남, 경북 등과 더불어 여성 종업원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고용과 복지 연계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강원, 제주 등 3곳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광역 지자체별 평균 1인당 인건비를

살펴보는 것도 고용과 산업 연계 혹은 고용과 복지 연계 유형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고용과 산업 연계 지역으로 분류한 울산, 대전, 충남, 경북 등 4곳과 더불어 전 산업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용과 복지 연계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강원, 제주 등 3곳의 전 산업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 서울시 고용거버넌스 구축 제언

서울의 고용-산업 연계형 특징은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전에 서울의 사회주체들이 고용거버넌스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타 지역에서 지역 고용거버넌스 기구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법적 성격이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발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지역 노사정협의회 설립 근거가 형해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임시 의원대회서 결의한 이후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모든 기구에 불참했던 것을 고려할 때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즉,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거부였다면 그 형식적이고 법적인 거부 사유는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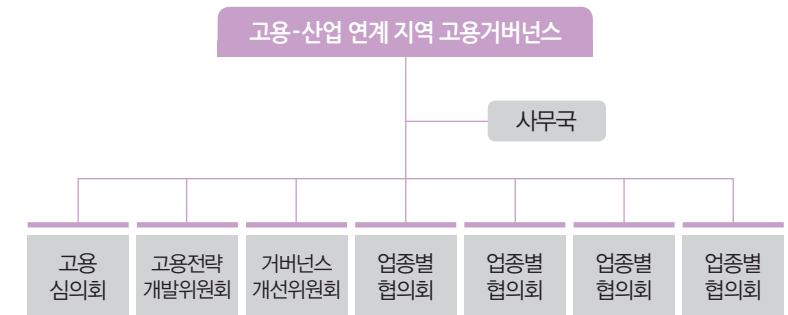
다음으로 노발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 고용심의회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통합될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지자체들은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경남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 고용심의회가 통합·운영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역 단위 각종 고용·노사 관련 의견 조율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 내 관련 협의체를 일원화하려는 지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지역 고용포럼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포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지역 고용거버넌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고용거버넌스 기구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정책법 제6조에 정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광범위한 고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지역과 관련하여 '지역고용 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

무가 있다. 그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실질적인 고용거버넌스 기구가 구축되고 운영되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서울의 사회 주체가 그러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와 역량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 유형화 분류를 통해 좀 더 나은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서울의 노사민정 사회 주체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둘러싼 법적 조항이나 각종 정부 지원을 자원으로 삼아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노발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항들을 서울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역 관련 정책지원 사업에서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사회주체들의 고용정책 역량과 고용사업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서울시가 예산규모가 크고 재정 독립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고용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정도는 아니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용과 산업 연계형 지역인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과 산업이 연계된 지역도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네트워크가 발전된 지역,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인 기업 간 네트워크가 발전된 지역(모기업-하청기업), 그리고 기업 상호 간 연관 없이 중소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농공단지 포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지닌 지역들은 서로 다른 고용거버넌스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기업 간 네트워크(모기업-하청기업)가 발전된 지역은 자동차부품업이나 조선업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고용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 네트워크가 발전된 지역은 의류업, IT, 문화콘텐츠 산업 등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고용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다. 한편, 기업 상호 간 연관 없이 중·소규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은 지역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고용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은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울산, 대전, 충남, 그리고 경북과 다른 방식으로 지역 고용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고용-산업 연계지역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실행 전략

서울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기구는 위 그림처럼 지역 고용심의회, 지역 고용전략개발위원회,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위원회라는 하부 위원회와 더불어 업종별 협의회를 하부 위원회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울은 광역수준과 기초수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고용거버넌스 기구의 구성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광역수준의 업종별 협의회는 다수 노사민정협의회 자치단체 노사민정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공공재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이들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며, 평가하는 식으로 말이다. 광역수준에서는 소홀히 하기 쉬운 복지문제를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에 연계시킬 수 있어 두 수준 사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성도 달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광역수준에서는 고용거버넌스에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기초수준에서는 공식적인 대표성이 없더라도 사회적 대표성을 부여받은 주체로 고용거버넌스가 구성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규용·임상훈 외, 2015, “지역 고용거버넌스 실행전략(II)”, 한국노동연구원
2. 윤유규·임상훈 외, 2012,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및 평가체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3. 전명숙·임상훈 외, 2011, “지역 고용 노사정파트너십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생생리포트



서울의 고용 동향

- I. 인구 및 취업자 동향
- II. 산업별 종사자 동향
- III. 산업별 노동수요와 임금 동향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정의영 연구원 altophone@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생생리포트

I. 인구 및 취업자 동향

1. 생산가능 인구는
정체된 가운데
고령층 인구만 급증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854만 9천 명이고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534만 9천 명으로 나타남. 취업자와 실업자는 각각 510만 2천 명, 24만 7천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를 기록함

〈표 1〉 서울시 인구현황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
15세이상인구	8,384	8,399	8,442	8,520	8,519	8,549
생산가능인구	7,426	7,400	7,398	7,437	7,384	7,382
경제활동인구	5,180	5,252	5,258	5,307	5,386	5,349
경제활동참가율	61.8	62.5	62.3	62.3	63.2	62.6
취업자	4,936	5,012	5,036	5,097	5,146	5,102
실업자	244	239	222	210	241	2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2010년(95만 8천 명)부터 2014년(113만 5천 명)까지 18.5% 증가한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742만 6천 명에서 738만 4천 명으로 0.6% 감소함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 854만 9천 명 중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86.3%인 738만 2천 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13.7%인 116만 7천 명
 - 서울시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표 2〉 서울시 연령별 인구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2010년	2014년
생산가능인구 (15~64세)	7,426	7,384
65세 이상	958	1,1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①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기준

- 2013년 기준 서울시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0.97명^①이며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10년 1분기 64.6에서 2015년 1분기 99.8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2. 고령층 고용은
확대된 반면,
청년층 고용은 감소

- 서울시의 2015년 1분기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p 낮은 59.7%이고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p 높은 4.6%로 나타남. 서울시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2015년 1분기 기준, 서울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만 7천 명(-0.3%)이 감소한 5,10만 2천 명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생산가능연령(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8.4%, 65.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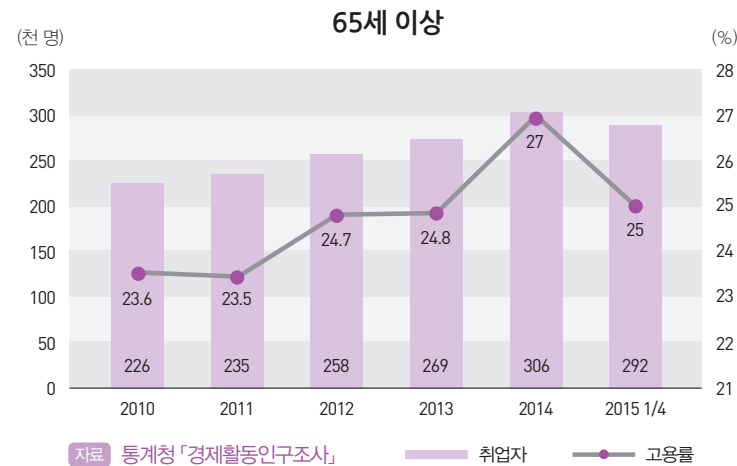
〈표 3〉 서울시 실업률, 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
실업률	4.5	4.7	4.6	4.2	4.0	4.5	4.6
고용률	58.1	58.9	59.7	59.7	59.8	60.4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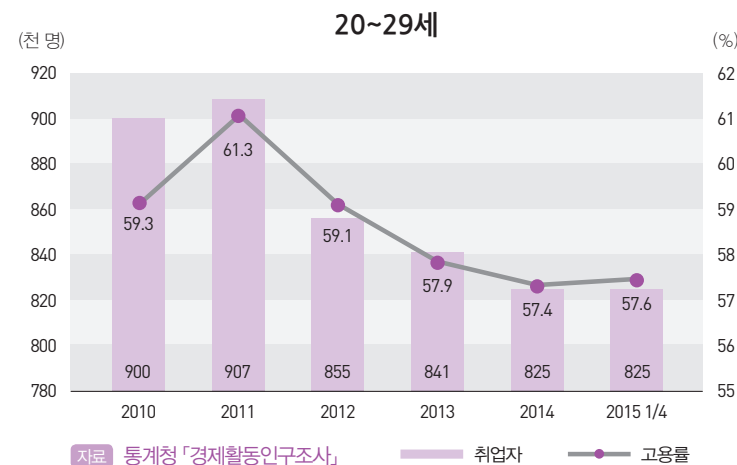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4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31만 5천 명으로 2010년에 비해 34.0%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은 2010년 대비 3.4%p 상승한 27.0%로 나타남. 이로 미루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 2015년 1분기의 고령층(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만 3천 명, 고용률은 25.0%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이 각각 0.3%p, 1.0%p 소폭 감소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천 명 상승한 29만 2천 명



[그림 1] 고령층 취업자, 고용률 변화 추이

-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03만 3천 명에서 2014년 97만 2천 명으로 5.9% 감소하였고, 청년층 고용률은 2010년 43.6%에서 2014년 43.7%로 0.1%p 상승하였음.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주연령대인 20~29세 청년층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98만 3천 명에서 92만 2천 명으로 7.9%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2010년 59.3%에서 2014년 57.4%로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10년 8.4%에서 2014년 10.3%로 1.9%p 상승
- 단, 2015년 1분기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한 44.2%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87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청년층 취업자, 고용률 변화 추이

- 경제의 중추인력이자 서울시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0~40대 취업자는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247만 7천 명이고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8.5%를 차지
- 30~40대 취업자 수는 2010년 257만 9천 명에서 2014년 253만 6천 명으로 1.7% 감소
- 전체 취업자 대비 30~40대 취업자 비중은 2010년 이래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고, 2014년 전체 취업자 대비 30~40대 취업자 비중은 49.3%으로 이는 2010년 52.3% 대비 3.0%p 감소한 수치

〈표 4〉 서울시 연령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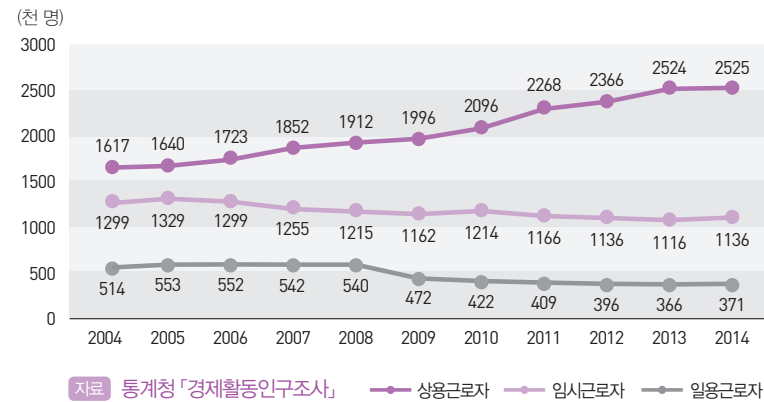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
계	4,936	5,012	5,036	5,097	5,146	5,102
15 ~ 29세	945	958	903	881	872	877
20 ~ 29세	900	907	855	841	825	825
30 ~ 39세	1,257	1,250	1,281	1,298	1,283	1,265
40 ~ 49세	1,322	1,323	1,283	1,282	1,253	1,212
50 ~ 59세	967	1,010	1,055	1,092	1,143	1,149
60세 이상	444	471	513	546	596	600
65세 이상	226	235	258	269	306	2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상용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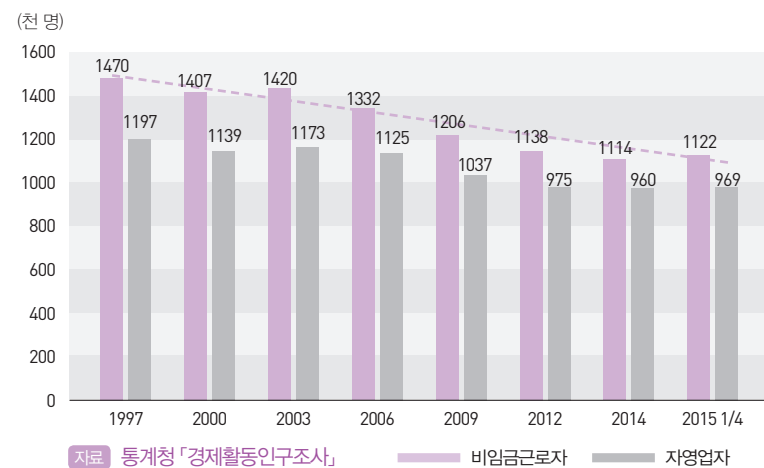
② 상용근로자는 ①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 설정된 자 또는 ②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내규에 채용되어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함.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혹은 일일 단위인 근로자를 지칭

- 서울시의 임금근로자는 2010년 373만 3천 명에서 2014년 403만 2천 명으로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398만 명을 기록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49만 명, 임시근로자는 110만 9천 명, 일용근로자는 38만 1천 명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0.1% 감소하고 7.6% 증가한 수치
- 2004년 이후 상용근로자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수는 대체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일자리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추세가 나타남
-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사업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상용직 비중이 높은 분야의 고용 증가와 상용직 중심주의 기업 고용관행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서울시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추이

- 서울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2010년 120만 3천 명에서 2014년 111만 4천 명으로 4년간 7.4% 감소함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12만 2천 명이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2%를 차지함.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수는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5천 명(4.9%) 증가한 96만 9천 명
 - 2014년 서울시의 자영업자는 총 96만 명이며 이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6.3% 감소한 수치임. 자영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충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최고점(119만 7천 명)에 올랐으나 이후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내수 부진의 여파와 자영업자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신규 시장진입 위축 등을 이유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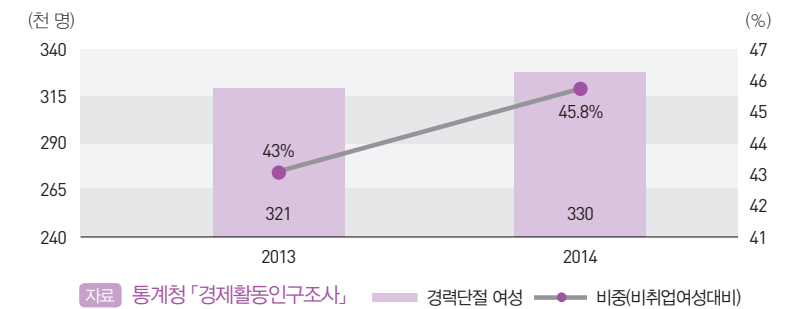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추이

4.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 주당근무시간의 감소

③
경력단절 여성 범위에
'가족 돌봄'이 포함

- 2014년 기준 서울시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44.3%인 227만 9천 명이며, 2015년 1분기 서울시 여성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천 명 증가한 226만 5천 명
 - 2014년을 기준으로 178만 8천 명의 15~54세 기혼 여성(A)중 비취업 여성(B)은 72만 명이며 이 중 35만 5천 명이 경력단절 여성(C)임. 이는 전체 기혼 여성 대비(C/A) 19.8%, 비취업 여성 대비(C/B) 49.2%를 차지하는 수치
 - 여성 경력단절 범위에 '가족 돌봄'을 제외할 경우, 2014년 서울의 경력단절 여성은 총 33만 명이며, 이는 전체 기혼 여성 대비(C/A) 18.5%, 비취업 여성 대비(C/B) 45.8%를 차지하는 수치임. 2013년과 비교 시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9천 명 증가했으며,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2.8%p 상승



[그림 5] 경력단절 여성 증가 추이

- 주당평균취업시간^④은 2004년 48.5시간에서 2014년 44.1시간으로 4.4시간 감소
 - 2004년에는 54시간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36~44시간 취업자가 전체의 36.5%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2004년 이후로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 5] 주당평균취업시간에 따른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

	2004년	2014년	증감률
54시간 이상 취업자	1,762	1,108	-37.1
36~44시간 취업자	1,161	1,878	61.8
36시간미만 취업자	589	706	19.9

④
주당평균취업시간은
1주일 동안 실제 일한
시간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산업별 종사자 동향^⑤

- 서울시 지역 총생산(GRDP)^⑥은 2008년 279조 455억 원에서 2013년 308조 5,562억 원으로 10.6% 증가하고, 서울의 총 종사자수는 같은 기간 12.4% 증가
 - 2013년 지역 총생산을 기준으로 각 산업이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16.8%), 사업 서비스업(12.2%), 금융 및 보험업(11.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10.1%), 부동산업 및 임대업(10.0%), 제조업(5.5%)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서울시 종사자 수는 2008년 407만 9천 명에서 2013년 458만 5천 명으로 12.4%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체 수는 72만여 개에서 78만 5천 개로 9.1% 증가함

〈표 6〉 서울시 주요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억 원, %]

	2008년	2013년 (잠정치)	주요 산업별 GRDP 성장률 (2008~2013)	주요 산업별 GRDP 비중 (2013년 기준)
지역 총생산	2,790,455	3,085,562	10.6	100
제조업	150,119	168,555	12.3	5.5
건설업	85,741	70,539	-17.7	2.3
도매 및 소매업	416,379	519,661	24.8	16.8
운수업	79,943	91,461	14.4	3.0
숙박 및 음식점업	89,939	85,556	-4.9	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3,819	312,519	23.1	10.1
금융 및 보험업	307,397	364,910	18.7	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0,014	308,701	2.9	10.0
사업서비스업	360,988	375,065	3.9	12.2
교육서비스업	135,759	137,534	1.3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6,401	121,895	26.4	4.0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⑤ 서울시 지역 총생산과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의 실익이 있는 산업만을 선별적으로 분석함

^⑥ 이 절에서 지역 총생산은 2010년을 기준년 가격(연쇄)으로 하며 생산지수 역시 2010년(=100)을 기준으로 한 불변지수 값으로 함. 또한, 보다 세부적인 산업별 분석을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와 같이 2015년 현 시점에 2013년 이후 통계치가 집계되지 않은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시계열 범위가 주로 2013년으로 제한됨

〈표 7〉 서울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체수	719,687	723,086	729,731	752,285	780,887	785,094
종사자수	4,079,277	4,177,336	4,487,357	4,498,312	4,541,393	4,585,09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전체 종사자 대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9.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7%)이 그 뒤를 이음
- 서울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문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가장 빠른 반면, 제조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함

〈표 8〉 서울시 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13년	종사자 수 성장률	종사자 수 비중 (2013년 기준)
전 산업	4,079,277	4,585,090	12.4	100
제조업	294,649	272,972	-7.4	6.0
건설업	232,612	286,131	23.0	6.2
도매 및 소매업	768,012	826,015	7.6	18.0
운수업	249,225	256,611	3.0	5.6
숙박 및 음식점업	393,802	443,079	12.5	9.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5,087	314,316	23.2	6.9
금융 및 보험업	241,494	257,803	6.8	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2,052	139,538	-1.8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5,314	399,412	15.7	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2,163	360,854	19.4	7.9
교육 서비스업	270,794	313,846	15.9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5,599	280,428	36.4	6.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13년 기준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에 각각 28만 명과 31만 4천명이 종사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각각 36.4%, 23.2% 증가한 수치
- 2013년에 제조업에는 27만3천 명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는 14만 여 명이 종사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각각 7.4%, 1.8% 감소한 수치

1. 도·소매업은 생산, 고용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 점유

- 서울은 지역 총생산과 종사자 수 측면에서 도·소매업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가장 높음
 - 서울의 도·소매업 지역 총생산은 2008년 41조 6379억 원에서 2013년 51조 9661억 원으로 24.8% 상승함. 지역 총생산에서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2009년 14.7% → 2013년 16.8%)
 - 2013년 서울시 도·소매업 부문의 매출액은 2008년에 비해 38.1% 상승(268조 8,591억 원 → 371조 3,783억 원)하였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의 연간 급여액은 15.9% 증가함(14조 6,851억 원→17조 227억 원)
-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서울 소재 도·소매업 종사자수는 76만 8천 명에서 82만 6천 명으로 7.6% 증가함.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종사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은 18.8%에서 18.0%로 0.8%p 감소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소매업 사업체수는 20만 9천 개에서 22만 7천 개로 8.4% 증가하였음. 도·소매업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08년 3.7명에서 2013년 3.6명으로 소폭 감소함
 - 도·소매업은 재래시장 등의 위축과 소규모 업체의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 요인과 업종의 대형화, 새로운 유형의 사업·시장 출현으로 인한 고용 증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3%가량을 차지함(2008년 3.2% → 2013년 2.8%).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GRDP는 2008년 8조 9,939억 원에서 2013년 8조 5,556억 원으로 4.9% 감소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매출액은 2008년 22조 2,378억 원에서 2013년 23조 7,260억 원으로 6.7%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17조 9,016억 원에서 21조 8,072억 원으로 21.8% 증가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2.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성과는 저조하나, 고용은 평균 정도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9.7%를 차지하며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39만 4천 명에서 44만 3천 명으로 12.5% 증가함

- 사업체 수는 2008년 11만 4천 개에서 2013년 12만 4천 개로 8.3% 증가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8년 대비 0.1명 증가한 3.6명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에서 많은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종사자 규모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이 적어 향후 지속적인 고용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9〉 서울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개, 명, %]

항목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8년	2013년	성장률	2008년	2013년	성장률
GRDP (비중)	416,379 (14.9)	519,661 (16.8)	24.8	89,939 (3.2)	85,556 (2.8)	-4.9
사업체수	209,131	226,629	8.4	114,115	123,634	8.3
종사자수	768,012	826,015	7.6	393,802	443,079	12.5
매출액	2,688,591	3,713,783	38.1	222,378	237,261	6.7
영업비용	2,514,092	3,545,895	41.0	179,015	218,072	21.8
연간 급여액	146,851	170,227	15.9	36,610	41,569	13.5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 「지역소득통계」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빠른 고용 증가

- 서울시 지역 총생산에서 도·소매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36조 988억 원에서 2013년 37조 5,065억 원으로 3.9% 증가함
 - 2008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서울시 GRDP의 12.9%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이후 비중이 소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전체 GRDP의 12.2%를 기록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8.2% 상승(12조 5,647억 원 → 16조 1,119억 원)하였고, 연간 급여액은 33.0% 증가함(5조 102억 원 → 6조 6,626억 원)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30만 2천 명에서 36만 1천 명으로 19.4% 증가함. 전체 종사자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4%에서 2013년 7.8%로 0.4%p 상승

-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9천여 개에서 1만 2천여 개로 38.0% 증가하였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33.4명에서 28.9명으로 4.5명 감소함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체로 특별한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노동집약적인 업종 특성상 구인 수요가 많음. 최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은퇴 이후 고령층이 활발히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층 노동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서울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산업의 중요도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 10〉 서울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개, 명, %]

항목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008년	2013년	성장률	2008년	2013년	성장률
사업체수	932	1,903	104.2	8,123	10,592	30.4
종사자수	69,876	85,523	22.4	232,287	275,331	18.5
매출액	22,269	27,815	24.9	103,377	133,304	28.9
연간 급여액	10,505	14,225	35.4	39,597	52,401	32.3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 모두 가장 빠른 성장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013년 지역 총생산은 12조 1,859억 원이며 이는 2008년 대비 26.4% 상승한 수치로 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서울시 전체 총생산의 4.0% 수준(2013년 기준)으로 아직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008년 17조 1,192억 원에서 2013년 24조 1,308억 원으로 41.0% 증가하였으며, 연간 급여액은 2008년 5조 5,399억 원에서 2013년 8조 2,830억 원으로 49.5% 가량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2008년 20만 6천 명에서 2013년 28만 명으로 36.4% 상승하여 산업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종사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5.0%에서 2013년 6.1%로 1.1%p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8년 2만 개에서

2013년 2만 5천 개로 23.4% 상승하였으며 업체당 종사자수는 10.2명에서 11.2명으로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종사자 수, 생산지수, 매출액, 연간급여액 등 많은 부문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부의 육아 보육 지원 확대, 고령화 사회 진전과 같은 요인이 결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생산과 고용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11〉 서울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개, 명, %]

항목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8년	2013년	성장률	2008년	2013년	성장률
사업체수	14,784	16,438	11.2	5,456	8,546	56.6
종사자수	156,725	193,981	23.8	48,874	86,447	76.9
매출액	151,090	211,663	40.1	20,102	29,646	47.5
연간 급여액	47,635	68,581	44.0	7,763	14,249	83.5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만, 금융 및 보험업은 산업성과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25조 3,819억 원에서 2013년 31조 2,519억 원으로 23.1% 증가함. 이는 도·소매업 다음으로 높은 성장 수준임. 서울시 전체 지역 총생산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0.1%이며 이는 2008년 대비 1.0%p 상승한 수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008년 40조 4,900억 원에서 2013년 55조 9,832억 원으로 38.3% 상승하였고, 연간 급여액은 7조 4,626억 원에서 10조 563억 원으로 34.8% 상승함
- 2013년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에서는 2008년 대비 23.2% 상승한 31만 4천 명이 종사함. 이는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6.9%로 2008년 보다 0.6%p 높은 수준임. 한편, 종사자수 증가율 23.2%는 전 산업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8년 1만 2천 개에서 2013년 1만 9천 개로 59.7% 증가하였고, 사업체당 중

사자 수는 21.2명에서 16.3명으로 4.9명 감소함

- 2013년을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의 GRDP 비중을 보여주는 타 산업과 비교 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총생산, 종사자 수 모두에서 빠른 수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과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동반성장형' 산업으로 판단됨. 특히,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정보 서비스업의 성장이 주목할 만함

〈표 12〉 서울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개, 명]

항목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사업체수	7,070	10,742	1,837	2,823	164	261	1,280	3,012	778	1,493
종사자수	138,944	155,797	16,323	24,136	14,455	17,348	32,370	57,659	19,752	28,097
매출액	227,944	254,966	24,646	45,264	45,470	66,250	70,200	141,364	36,641	51,988
연간 급여액	47,192	51,967	3,558	5,642	6,160	10,090	11,041	22,601	6,675	10,263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 금융 및 보험업은 2008년 이후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11% 내외를 차지함. 금융 및 보험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에 30조 7,397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11.0%임. 2013년 지역 총생산은 2008년 대비 18.7% 증가한 36조 4,910억 원으로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11.8%를 차지
- 금융 및 보험업의 종사자 수는 2008년 24만 1천 명에서 2013년 25만 8천 명으로 6.8% 상승함
 -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9천여 개에서 1만 개로 12.3% 상승하였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6.7명에서 25.4로 1.3명 감소함. 전체 종사자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의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완만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2010년 대비 0.4%p 하락한 5.6%를 기록함
 - 금융 및 보험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에 비해 종사자 규모가 작은 편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순이자 마진 감소와 주식 거래 규모 감소로 인한 수익 기반 약화, 국제

경제 리스크 증가로 인한 산업 불안정성 증가, 업종 특성상 낮은 구인 수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슷한 GRDP 규모의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됨

6.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업황 부진에 따른 고용 사정 악화 / 교육 서비스업은 성과 부진

- 건설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8조 5,741억 원에서 2013년 7조 539억 원으로 17.7% 감소했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같은 기간 30조 14억 원에서 30조 8,701억 원으로 2.9% 소폭 증가에 그침
 - 2013년 기준 건설업은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2.3%를 차지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0.0%를 차지함
 - 건설 수주액은 2008년 21조 2,429억 원에서 2013년 10조 7,881억 원으로 50%가량 급감하였고, 부동산 거래 건수 역시 2008년 이후로 상당히 위축됨
- 건설업 종사자 수는 2008년 23만 3천 명에서 2013년 28만 6천 명으로 23% 증가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6.2% 비중을 차지함
 - 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업체들이 플랜트 공정 등으로 해외 진출을 늘리면서 상용근로자의 수는 늘어났으나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음. 즉, 관리직 인원은 늘어났으나 국내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됨

〈표 13〉 서울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동(호) 수]

산업별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설업	GRDP	85,741	84,117	79,689	73,223	68,616	70,539
	건설 수주액	212,429	189,826	175,870	144,801	99,806	107,881
	사업체수	19,691	19,354	19,077	20,156	20,767	21,027
	종사자수	232,612	222,352	381,531	359,900	309,602	286,1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GRDP	300,014	300,655	305,223	312,031	309,214	308,701
	주택거래 건수	147,023	138,016	88,737	114,315	83,257	111,889
	사업체수	35,950	35,979	35,100	35,207	35,214	34,629
	종사자수	142,052	148,312	142,505	144,271	141,124	139,53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2008년 14만 2천 명에서 2013년 14만 명으로 종사자 수가 1.8%가량 감소하였고, 서울시 전체 종사자 중 이 업종이 차지하는 종사자 비중도 같은 기간 3.4%에서 3.0%로 0.4%p 감소
 - 같은 기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 수는 3만 6천여 개에서 3만 5천여 개로 3.7% 감소함. 업체 간 과당 경쟁, 부동산 시장 경기 불황이 결합하여 신규 진입은 줄어들고 기존 업체들은 시장에서 철수한 결과 종사자, 사업체수 모두 감소하였음
- 교육 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13조 5,759억 원에서 2013년 13조 7,534억 원으로 1.3% 증가함.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4.5%로 0.4%p 감소
-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08년 27만 1천 명에서 2013년 31만 4천 명으로 15.9% 증가했으며 2013년 기준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6.8%를 차지함.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08년 2만 9천 개에서 2013년 3만 2천 개로 11.7% 정도 증가
 - 교육 서비스업의 생산은 종사자, 사업체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함. 전반적으로 업계가 공급 과잉 상태인 가운데 내수 불황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 감소, 저출산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Ⅲ. 산업별 노동 수요와 임금 동향

1.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모두 증가

-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서울의 채용인원 수는 구인인원 수에 비해 증가세가 빠름
 - 2014년 구인인원은 20만 7천 명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61.1% 증가했으며, 채용인원은 10만 6천 명에서 18만 6천 명으로 75.1% 증가하여 채용인원의 증가세가 빠름
 - 2014년 채용률은 89.8%로 5년 전인 2009년 82.6%에 비해 7.2%p 상승하여 인력공급 상황 개선

〈표 14〉 서울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추이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2009~2014)
구인인원	128,625	168,824	158,571	161,463	183,606	207,270	61.1
채용인원	106,299	144,417	132,167	140,905	160,893	186,140	75.1
채용률	82.6	85.5	83.3	87.3	87.6	89.8	7.2

7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7

2. 구인인원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가장 빠름

- 서울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구인인원 수가 4만3천 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2014년 서울 산업별 구인인원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0.6%),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서울에서 2009년 대비 2014년 교육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139.1%로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음
 - 서울에서 2009년 대비 2014년 구인인원은 교육 서비스업(139.1%), 운수업(125.8%), 도매 및 소매업(10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9.0%) 부문의 증가세가 가장 빠르며, 제조업(-13.7%), 건설업(-8.5%) 부문은 감소

〈표 15〉 서울시 주요 산업별 구인인원 추이

[단위: 명, %]

	2009년	2014년	구인인원 증감률 (2009~2014)	구인인원 비중 (2014년 기준)
전 산업	128,625	207,270	61.1	100.0
제조업	8,698	7,507	-13.7	3.6
건설업	12,868	11,779	-8.5	5.7
도매 및 소매업	9,700	19,415	100.2	11.5
운수업	5,609	12,666	125.8	6.1
숙박 및 음식점업	9,858	14,446	46.5	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293	14,607	29.3	7.0
금융 및 보험업	5,807	6,225	7.2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07	4,131	47.2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45	15,325	49.6	7.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978	42,784	78.4	20.6
교육 서비스업	15,000	35,868	139.1	1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449	15,028	59.0	7.3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3. 금융 및 보험업 구인인원의 대부분은 채용되어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지고 있음을 시사

- 교육 서비스업의 채용인원 증가율이 2009년 대비 2014년 155.5%로 가장 빠르게 나타남
 - 서울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채용인원은 교육 서비스업(15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16.7%), 운수업(108.9%), 도매 및 소매업(107.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6.3%) 부문의 증가세가 가장 빠르며, 건설업은 5.6% 감소
- 2014년 서울의 채용률^⑧은 금융 및 보험업이 99.5%, 교육 서비스업이 98.9%로 구인인원 대비 채용인원 비중이 높아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2014년 서울 산업별 채용률은 금융 및 보험업(99.5%), 교육 서비스업(9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5.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91.5%) 순으로 높음

^⑧
채용률
= 채용인원/구인인원 * 100

– 서울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8.3%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6.2%p), 제조업(14.2%p)의 채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운수업(-4.8%p), 숙박 및 음식점업(-2.9%p), 부동산업 및 임대업(-2.1%p)의 채용률은 감소

〈표 16〉 서울시 주요 산업별 채용인원 및 채용률 추이

[단위: 명, %, %p]

	2009년		2014년		채용인원 증감률 (2009 ~2014)	채용률 증감 (2009 ~2014)
	채용 인원	채용률	채용 인원	채용률		
전 산업	106,299	82.6	186,140	89.8	75.1	7.2
제조업	6,294	72.4	6,499	86.6	3.3	14.2
건설업	11,273	87.6	10,643	90.4	-5.6	2.8
도매 및 소매업	8,046	82.9	16,675	85.9	107.2	2.9
운수업	3,620	64.5	7,561	59.7	108.9	-4.8
숙박 및 음식점업	8,795	89.2	12,471	86.3	41.8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690	77.0	12,228	83.7	40.7	6.8
금융 및 보험업	5,566	95.8	6,193	99.5	11.3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77	91.8	3,704	89.7	43.7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32	74.5	14,221	92.8	86.3	1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077	75.4	39,165	91.5	116.7	16.2
교육 서비스업	13,885	92.6	35,473	98.9	155.5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863	93.8	14,377	95.7	62.2	1.9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4. 운수업의 미충원율^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⑨
미충원율
= 미충원인원/구인인원 * 100

- 2014년 서울의 미충원인원은 2만 1천 명이며 미충원율은 10.2%로 2009년 대비 7.2%p 감소
 - 2014년 미충원율이 높은 부문은 운수업(4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6.3%) 도매 및 소매업(14.1%), 숙박 및 음식점업(13.7%), 제조업(13.4%) 순
 - 미충원율이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많이 증가한 부문은 운수업(4.8%p), 숙박 및 음식점업(2.9%p), 부동산업 및 임대업(2.2%p) 순이며, 감소한 부문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3%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6.2%p), 제조업(-14.2%p) 순

〈표 17〉 서울시 주요 산업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명, %, %p]

	2009년		2014년		미충원인원 증감률 (2009 ~2014)	미충원율 증감 (2009 ~2014)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전 산업	22,326	17.4	21,130	10.2	-5.4	-7.2
제조업	2,404	27.6	1,008	13.4	-58.1	-14.2
건설업	1,595	12.4	1,136	9.6	-28.8	-2.8
도매 및 소매업	1,654	17.1	2,740	14.1	65.7	-2.9
운수업	1,989	35.5	5,105	40.3	156.7	4.8
숙박 및 음식점업	1,063	10.8	1,975	13.7	85.8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03	23.0	2,379	16.3	-8.6	-6.8
금융 및 보험업	241	4.2	32	0.5	-86.7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9	8.2	427	10.3	86.5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13	25.5	1,104	7.2	-57.7	-1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901	24.6	3,619	8.5	-38.7	-16.2
교육 서비스업	1,115	7.4	395	1.1	-64.6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86	6.2	651	4.3	11.1	-1.9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4년 서울 산업별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은 모두 운수업이 각각 5천 명,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산업 중 제조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구인인원이 34.7%로 감소하여 노동수요가 줄었지만 미충원율도 14.9%p 감소하여 노동공급이 좀 더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운수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구인인원이 125.8% 증가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충원율이 35.5%에서 40.3%로 4.8%p 증가하여 적합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시사

5. 서울 월급여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액과 특별 급여액은 감소

⑩ 월급여액
: 상용정액급여 + 상용초과급여

⑪ 초과급여
: 연장(야간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⑫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4년 서울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⑩총액은 316만 9천 원으로 2009년 대비 21.9% 증가
 -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311만 4천 원으로 5년 전 대비 22.8%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⑪는 8만 5천 원, 특별급여^⑫는 47만 3천 원으로 각각 5년 전 대비 3.3%, 5.3% 감소

〈표 18〉 서울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단위: 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2009 ~2014)
상용 월급여액	2,623,984	2,774,256	2,921,496	3,007,110	3,168,798	3,199,814	21.9
상용 정액급여	2,535,592	2,686,340	2,846,851	2,938,614	3,092,925	3,114,382	22.8
상용 초과급여	88,391	87,916	74,645	68,496	75,872	85,432	-3.3
상용 특별급여	499,106	528,692	493,464	482,663	478,051	472,861	-5.3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6. 금융 및 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나타남

- 2014년 서울의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은 438만 5천 원으로 가장 많고 2009년 대비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운수업으로 30.8% 증가
 -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438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3만 7천 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5만 9천 원 순
 - 특별급여 또한 월평균 임금과 더불어 금융 및 보험업이 153만1천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년 전 대비 4.5% 감소
 - 서울의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채용률이 99.5%로 가장 높고, 월평균 임금도 438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호 직종으로 판단됨
 - 미충원율이 40.3%로 가장 높은 운수업은 월평균 임금이 5년 전 대비 30.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적고 특별급여도 11.9% 감소

〈표 19〉 서울시 주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

[단위: 원, %]

	2009년		2014년		월급여액 증감률 (2009 ~2014)	특별급여 증감률 (2009 ~2014)
	상용 월급여액	상용 특별급여	상용 월급여액	상용 특별급여		
전 산업	2,623,984	499,106	3,199,814	472,861	21.9	-5.3
제조업	2,543,864	355,504	2,960,599	178,215	16.4	-49.9
건설업	2,826,018	365,508	3,541,547	347,777	25.3	-4.9
도매 및 소매업	2,506,380	352,446	3,166,624	574,561	26.3	63.0
운수업	2,297,897	875,312	3,005,809	771,084	30.8	-11.9
숙박 및 음식점업	1,740,903	282,301	2,050,074	133,871	17.8	-5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934,769	350,056	3,559,187	447,030	21.3	27.7
금융 및 보험업	3,607,554	1,603,012	4,384,537	1,531,482	21.5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26,753	260,673	2,517,066	125,276	18.4	-5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45,438	374,886	4,136,925	445,151	23.7	1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30,477	237,045	1,796,032	83,954	10.2	-64.6
교육 서비스업	3,113,738	678,187	3,524,248	226,807	13.2	-6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69,759	570,719	2,670,498	514,207	17.7	-9.9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7.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운수업

- 2014년 서울에서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02.4시간(주당 평균 50.6시간)이며 2009년 대비 근로시간은 운수업이 0.8%로 가장 크게 증가
 - 평균 근로시간이 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02.4시간(주당 평균 50.6시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4시간(주당 평균 47.9시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1.5시간(주당 평균 45.4시간), 제조업 181시간(주당 평균 45.3시간) 순
 - 2009년 대비 2014년 근로시간이 증가한 부문은 운수업(0.8%), 금융 및 보험업(0.5%), 숙박 및 음식점업(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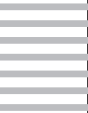
- 2014년 서울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2만 5천 원이며 2009년 대비 시간당 임금은 도매 및 소매업이 31.3%로 가장 크게 증가
 -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 2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만 4천 원, 교육 서비스업 2만 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만 원, 건설업 2만 원 순
 - 2009년 대비 2014년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은 도매 및 소매업(31.3%), 건설업(30.2%), 운수업(29.8%) 순
 - 미충원율이 40.3%로 가장 높은 운수업은 시간당 임금이 29.8% 증가한 반면, 근로시간 역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간당 임금 또한 1만 7천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 서울시 주요 산업별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단위: 시간, 원, %]

	2009년		2014년		근로시간 증감률 (2009 ~2014)	시간당임금 증감률 (2009 ~2014)
	총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총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전 산업	184.2	14,245.3	178.9	17,886.0	-2.9	25.6
제조업	189.6	13,417.0	181	16,356.9	-4.5	21.9
건설업	185.4	15,242.8	178.4	19,851.7	-3.8	30.2
도매 및 소매업	187.4	13,374.5	180.3	17,563.1	-3.8	31.3
운수업	178.5	12,873.4	179.9	16,708.2	0.8	29.8
숙박 및 음식점업	201.5	8,639.7	202.4	10,128.8	0.4	17.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6.8	16,599.4	175.9	20,234.2	-0.5	21.9
금융 및 보험업	173.6	20,780.8	174.5	25,126.3	0.5	2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4.7	10,389.6	191.4	13,150.8	-6.5	2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9	18,689.6	175.3	23,599.1	-2.1	26.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9.1	8,622.3	181.5	9,895.5	-4.0	14.8
교육 서비스업	180	17,298.5	173	20,371.4	-3.9	17.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1.6	12,498.7	173.2	15,418.6	-4.6	23.4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은?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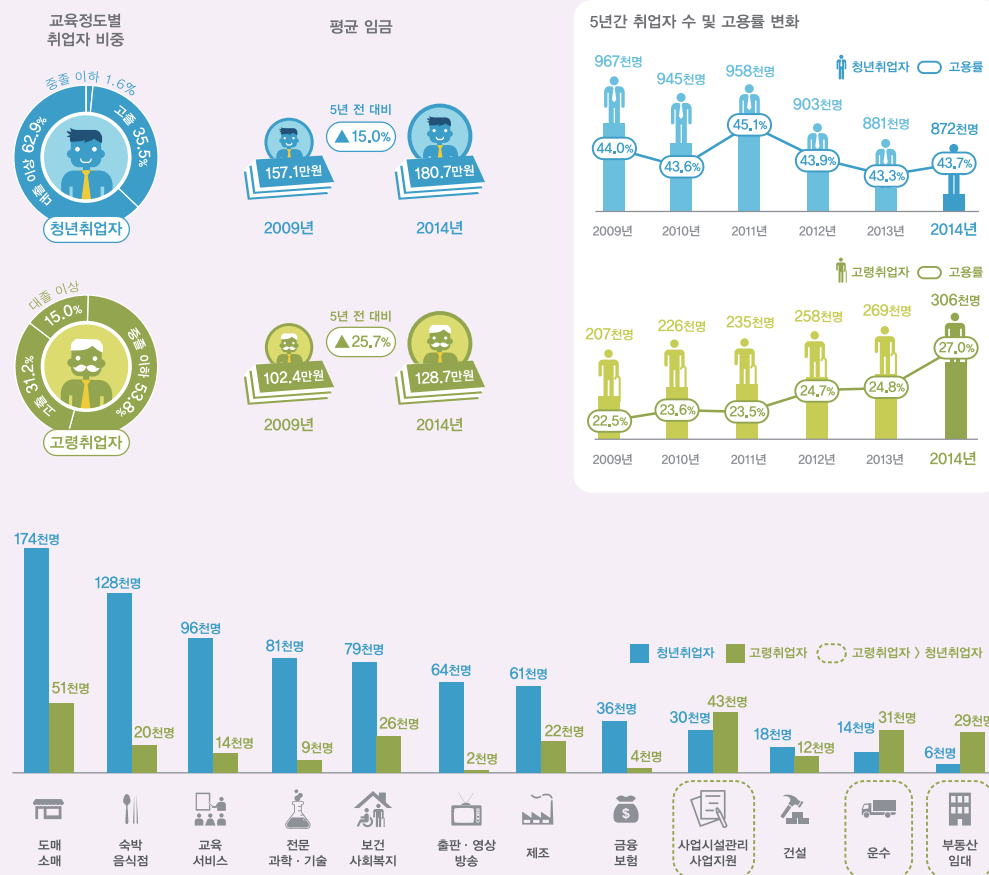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은?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은?



지난 5년간 서울의 청년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고령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

5년 전 대비 임금 상승률도 고령취업자가 청년취업자를 앞질러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운수', '부동산·임대' 산업에서는
고령취업자 수가 청년취업자 수 보다 더 많아

서울의 청년취업자 평균 임금은 180.7만원,
고령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128.7만원

- 2014년 청년취업자의 대부분인 62.9%가 대졸 이상인 반면, 고령취업자는 53.8%가 중졸 이하로 나타남
- 청년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180.7만원으로 고령취업자 평균 임금 128.7만원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고령취업자의 임금은 5년 전 대비 25.7% 상승하여, 청년취업자 15.0% 보다 빠르게 상승
- 청년취업자와 고령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서울 전체 평균 임금인 251.9만원 보다 현저히 낮음

지난 5년간 서울의 청년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고령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

- 청년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고령취업자 수는 20만7천 명에서 30만6천 명, 고용률도 22.5%에서 27.0%로 지속적으로 증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운수', '부동산·임대' 산업에서는
고령취업자 수가 청년취업자 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취업자가 많은 산업은 '도매·소매' 17만4천 명, '숙박·음식점' 12만8천 명, '교육서비스' 9만6천 명 순이며 고령취업자는 '도매·소매' 5만1천 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4만3천 명, '운수업' 3만1천 명 순

〈표 1〉 2009년~2014년 연령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천 명, %]

	청년취업자		고령취업자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자수	고용률
2009	967	44.0	207	22.5
2010	945	43.6	226	23.6
2011	958	45.1	235	23.5
2012	903	43.9	258	24.7
2013	881	43.3	269	24.8

주 청년취업자 만 15세~29세, 고령취업자 만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2014년 서울 연령별 교육정도별 취업자

[단위: 명, %]

	청년취업자		고령취업자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중졸 이하	13,941	1.6	168,539	53.8
고졸	312,711	35.5	97,682	31.2
대졸 이상	553,021	62.9	46,965	15.0
전체	879,673	100.0	313,186	100.0

주 청년취업자 만 15세~29세, 고령취업자 만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2014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표 3〉 서울 연령별 취업자 평균 임금

[단위: 만 원, %]

	청년취업자 평균 임금	고령취업자 평균 임금	서울 취업자 평균 임금
2009년	157.1	102.4	212.2
2014년	180.7	128.7	251.9
2009년 대비 2014년 증감률	15.0	25.7	18.7

주 청년취업자 만 15세~29세, 고령취업자 만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2009, 2014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표 4〉 2014년 산업별 연령별 취업자 및 비중

[단위: 명, %]

	전체	청년층	비중	노년층	비중
전산업	5,162,104	879,673	17.0	313,187	6.1
제조업	488,389	61,331	12.6	22,490	4.6
건설업	338,428	18,416	5.4	11,992	3.5
도매 및 소매업	985,598	174,389	17.7	51,172	5.2
운수업	252,113	14,380	5.7	30,596	12.1
숙박 및 음식점업	485,480	127,657	26.3	19,882	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94,196	64,107	21.8	1,935	0.7
금융 및 보험업	239,300	36,250	15.1	3,500	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1,642	6,015	4.2	29,053	20.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64,513	81,154	22.3	8,532	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70,654	29,896	11.0	42,778	15.8
교육 서비스업	397,314	95,520	24.0	13,720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6,795	78,520	24.8	26,037	8.2

주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공공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서비스업 제외

자료 통계청(2014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제동향

요약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정의영 연구원 altophone@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경제동향 | 요약

요약 | 4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산

- 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2.2로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하여 생산 부진
- 4월 제조업 출하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 재고지수는 보합



소비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457억 원으로 전국(6조 3,473억 원)의 35.4% 차지
- 4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9%로 크게 증가



고용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1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 명(-0.8%) 감소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감소, 실업률은 4.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물가

- 2015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4(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
- 상품물가지수(-0.5%), 생활물가지수(-0.2%) 하락



부동산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 전세 물량 부족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0.4% 상승한 101.1 기록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전세 매물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61% 상승한 113.1 기록



금융

- 서울의 4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06조 7,844억 원으로 전월 대비 0.69% 증가
- 서울의 4월 은행 가계대출은 195조 8,37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
- 서울의 4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1,218억 원과 5,299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13.8%, 6.6% 증가
- 도·소매업에 대한 신용 보증을 중심으로 전 업종에서 보증금액이 전월 대비 증가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 보증지원 건수 전월 대비 증가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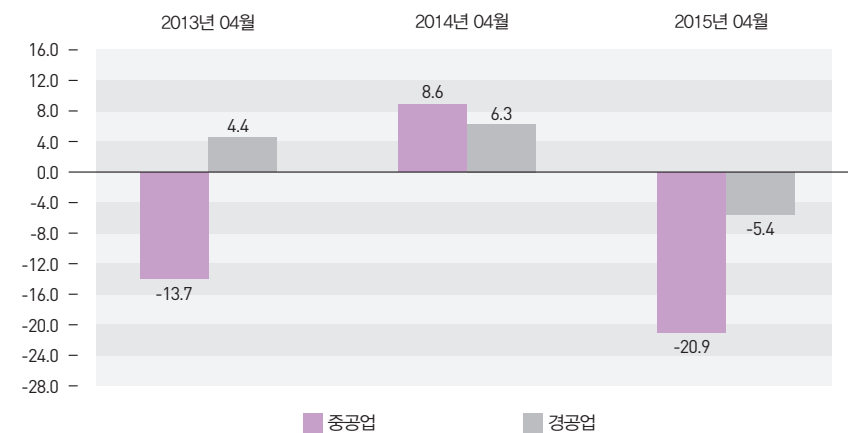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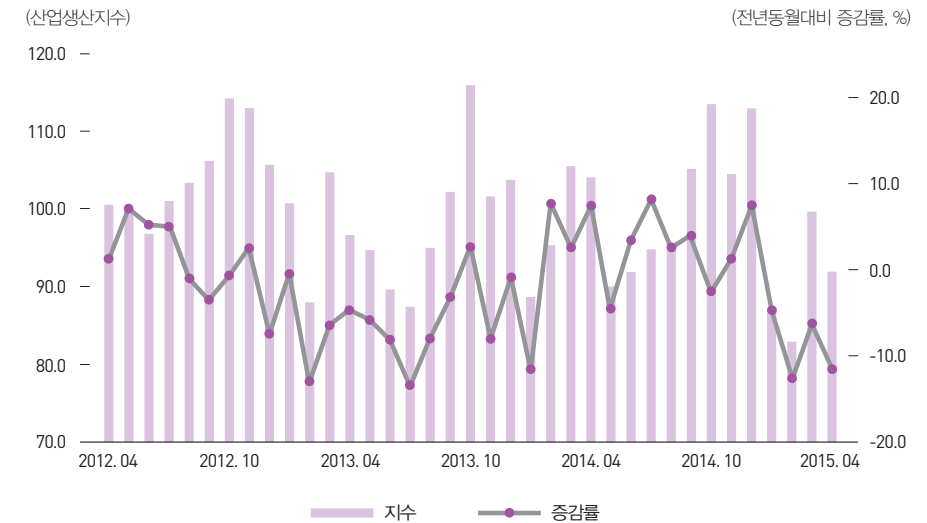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수출은 5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4월 수입은 12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 품목별로는 원유,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경제동향 | 생산

생산

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2.2(201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

- 중공업 부문은 20.9%, 경공업은 5.4%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화학제품(39.3%), 전기·가스·중공업(11.8%), 식료품(4.5%) 등은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31.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3.7%), 의복 및 모피(-6.1%) 등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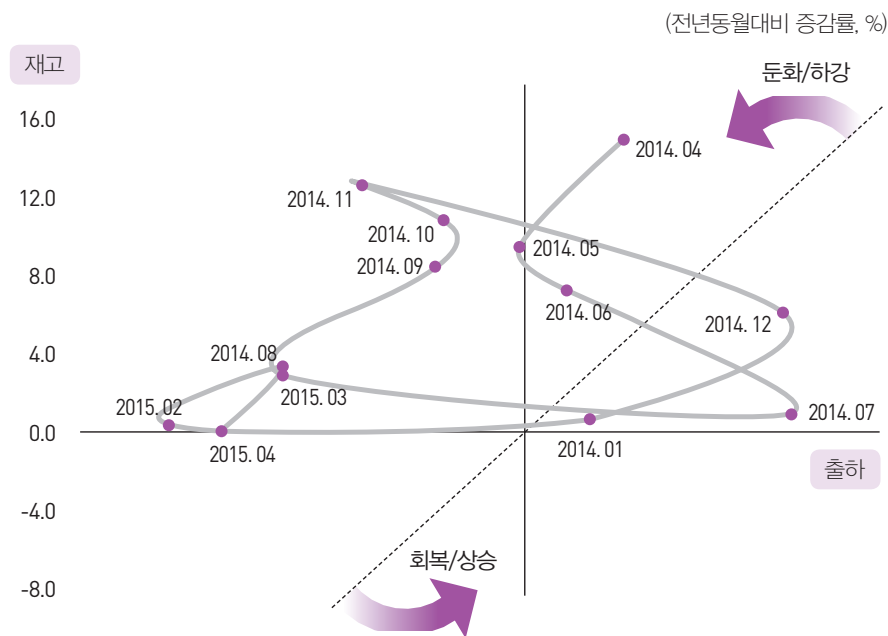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생산

출하 · 재고 순환

서울의 3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출하지수는 97.2(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
- 서울의 4월 재고지수는 121.0(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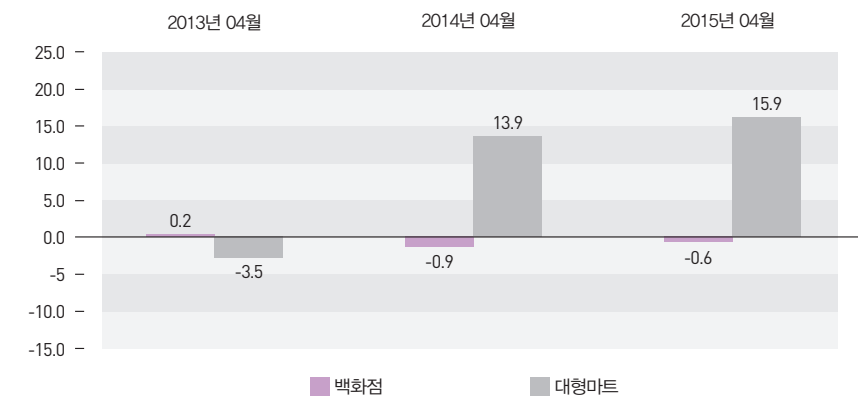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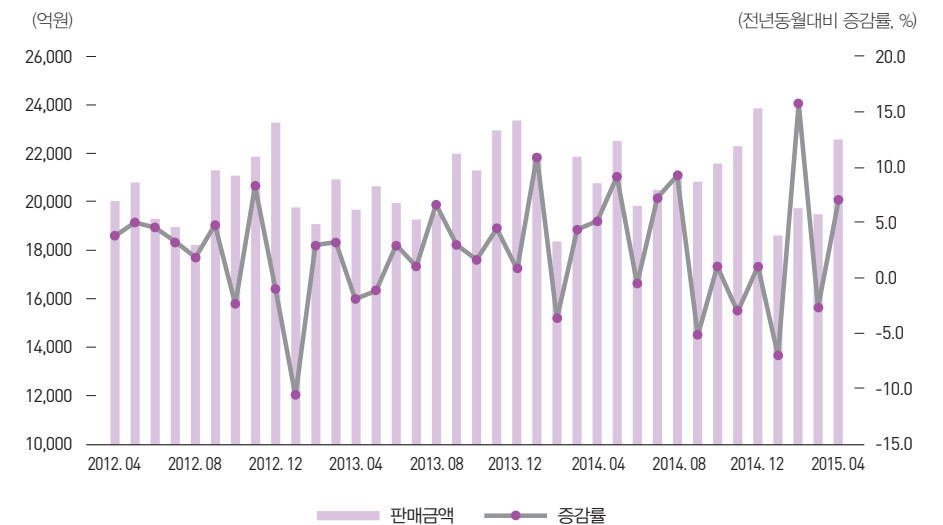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경제동향 | 소비

소비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2,457억 원으로 전국(6조 3,473억 원)의 35.4%
- 4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923억 원으로 전국(2조 3,822억 원)의 45.9%,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534억 원으로 전국(3조 9,652억 원)의 29.1%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0.6%)감소하였으나 대형마트 판매액은 급증(15.9%)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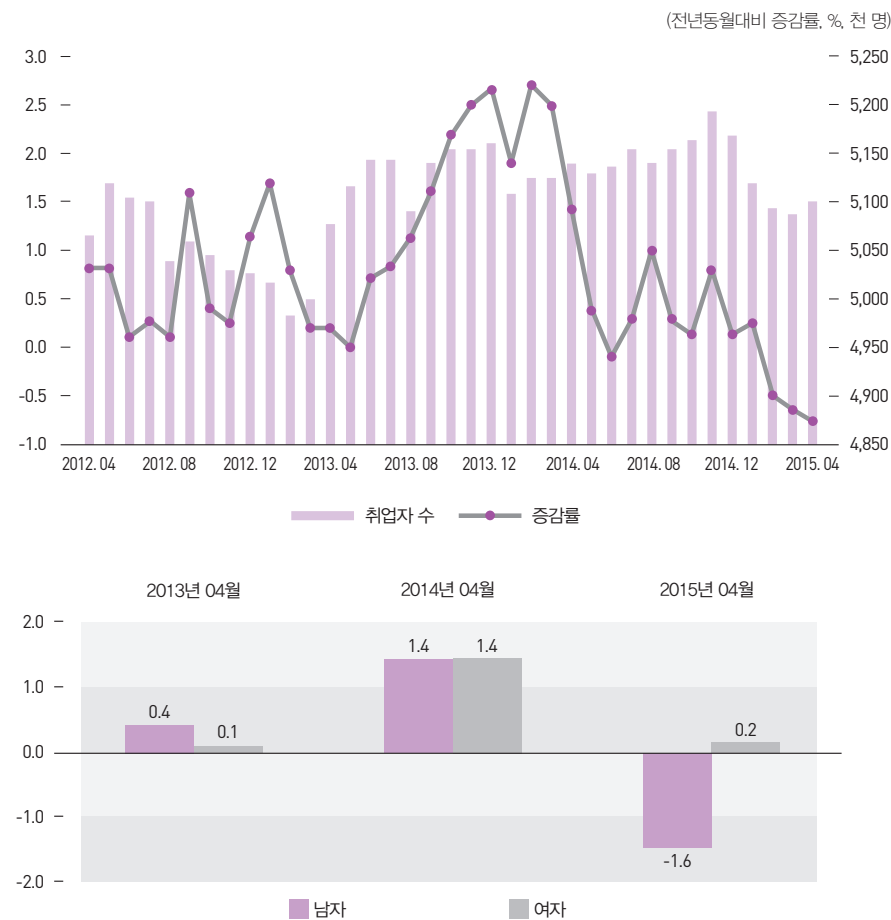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고용

취업자

서울의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1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 명(-0.8%)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8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5천 명(-1.6%) 감소하고, 여자는 226만 1천 명으로 4천 명(0.2%)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이 4만 명(2.8%), 제조업이 1만 1천 명(2.2%), 건설업이 4천 명(1.1%)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5만 1천 명(-6.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만 5천 명(-2.1%)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서울의 4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8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4월에는 증가
- 서울의 4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60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
- 고령층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014년 3월부터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경제동향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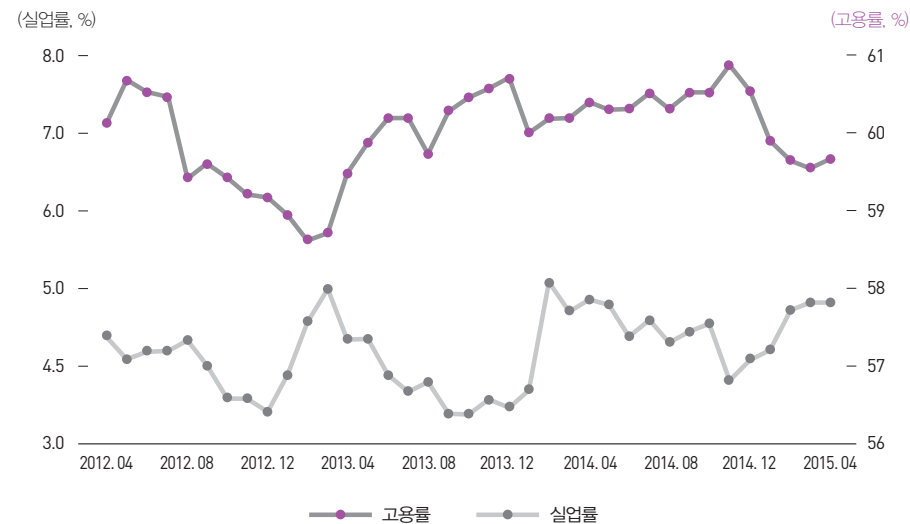
고용률 및 실업률

서울의 4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여 전국보다 낮은 수준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59.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p, 여자는 50.7%로 0.3%p 각각 감소
- 서울시 고용률은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높거나 같았으나, 4월에는 전국(60.9%)보다 낮은 수준

서울의 4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자는 2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3.9%) 감소
- 실업률은 4.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여자는 4.5%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
- 2015년 4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8%)에 비하여 0.6%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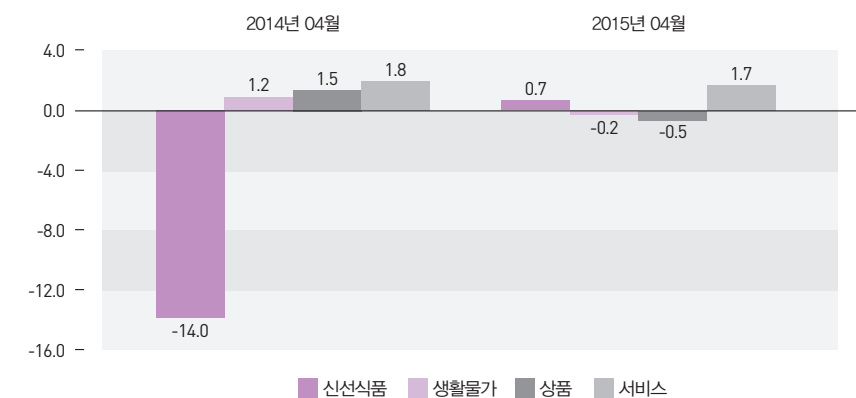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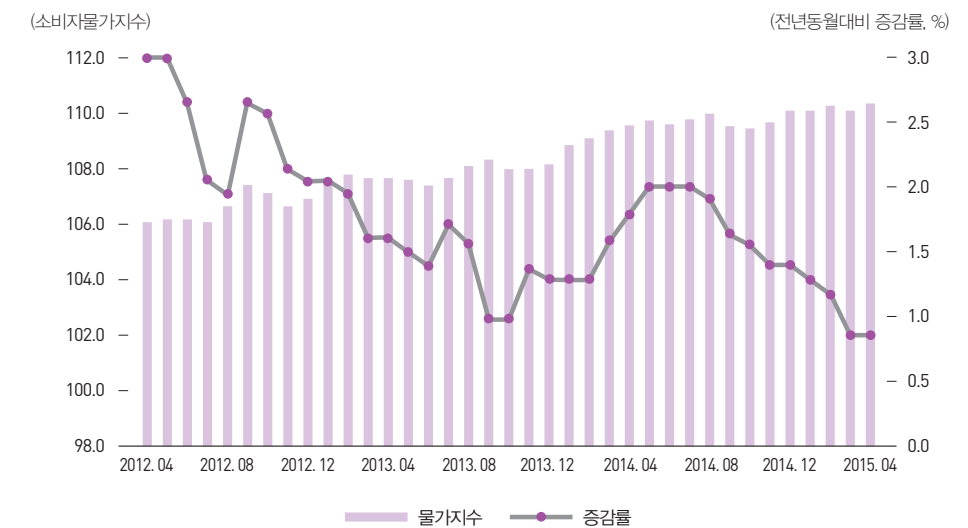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경제동향 | 물가

물가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

- 2015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4(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상품물가지수(-0.5%), 생활물가지수(-0.2%)는 하락한 반면 서비스물가지수(1.7%), 신선식품물가지수(0.7%)는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경제동향 |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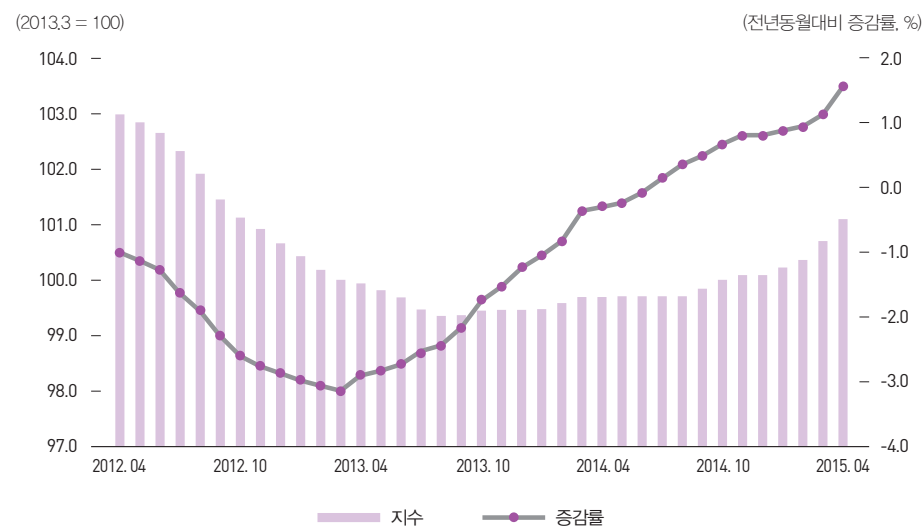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1.1로 전월 대비 0.4% 상승. 강남지역은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 강북지역은 매매전환 수요 및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실수요 발생 영향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
- 주요 상승지역: 구로구(0.97%), 서초구(0.8%), 노원구(0.6%), 동대문구(0.6%)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3.9로 전월 대비 0.5% 상승. 이는 저금리로 인한 구매력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 효과가 결합한 결과.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지방은 전월 대비 각각 0.5%, 0.6%, 0.3% 상승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매매거래건수 전월 대비 상승

-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1,690만 원), 매매거래건수(13,786건)는 전월 대비 각각 0.6%, 5.9% 상승
- 매매거래건수, 매매가격 모두 전월 대비 완만한 상승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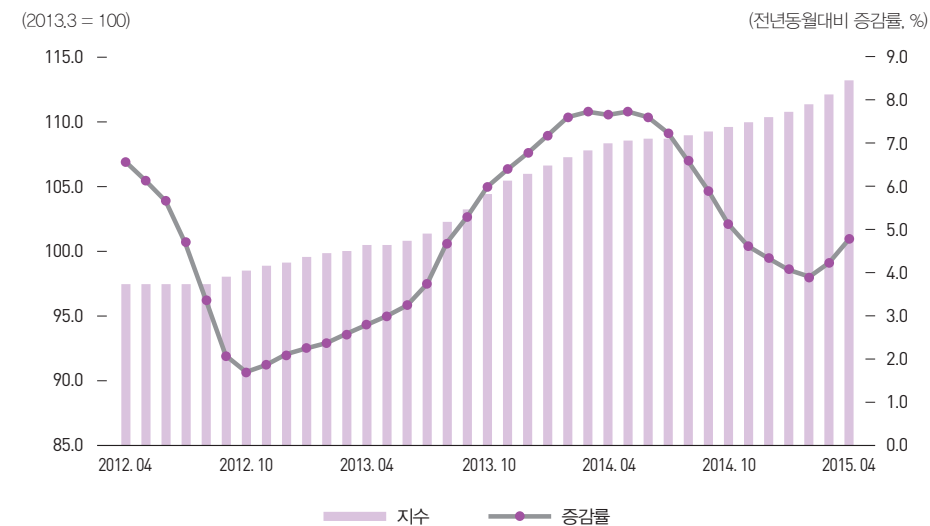
주택전세가격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3.1로 전월 대비 0.9% 상승.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강남지역(0.9%)의 경우 재건축 이주 발생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가, 강북지역(0.8%)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저렴한 전세 가격으로 인한 유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결과
- 주요 상승지역: 강동구(1.5%), 서초구(1.3%), 노원구(1.0%), 동대문구(1.0%)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한 103.9기록. 이는 저금리로 인한 월세 선호와 이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결과.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8%, 0.5%, 0.3% 상승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 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1,110만 원) 전월 대비 1.2% 증가한 반면, 전세거래건수(10,572건)는 전월 대비 21.7% 감소
- 전세 공급 감소,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제동향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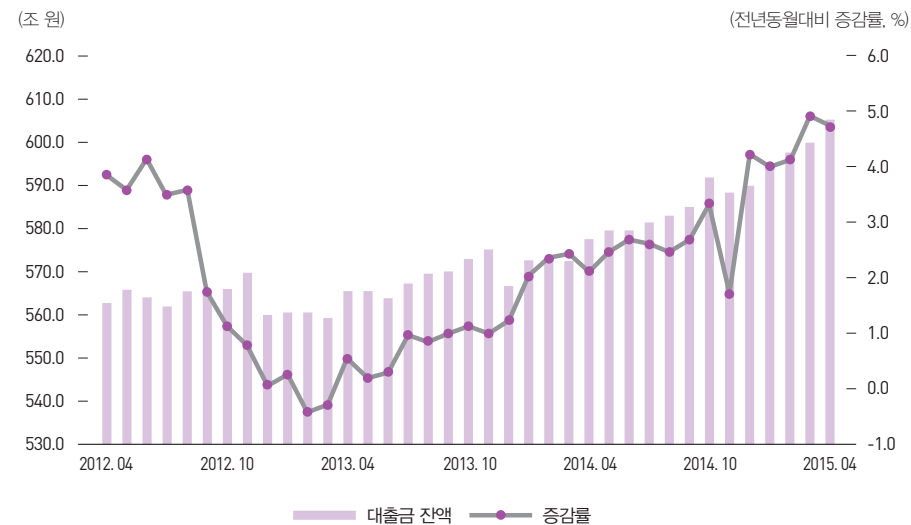
가계대출

4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606조 7,844원)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
- 그 중 예금은행(506조 9,894억 원)과 비예금은행(99조 7,950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9% 증가, 0.1%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각각 7.0% 증가, 5.0% 감소

4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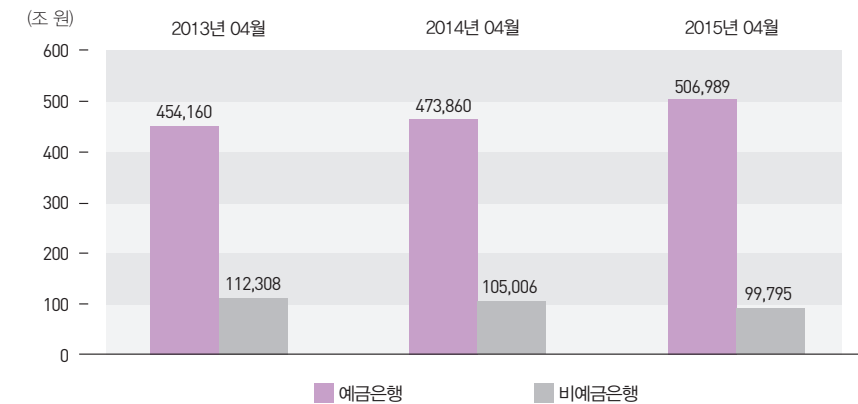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1,670조 4,788억 원)은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
- 그 중 예금은행(1,287조 4,155억 원)과 비예금은행(383조 633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1.1%, 0.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8%, 4.6% 증가



주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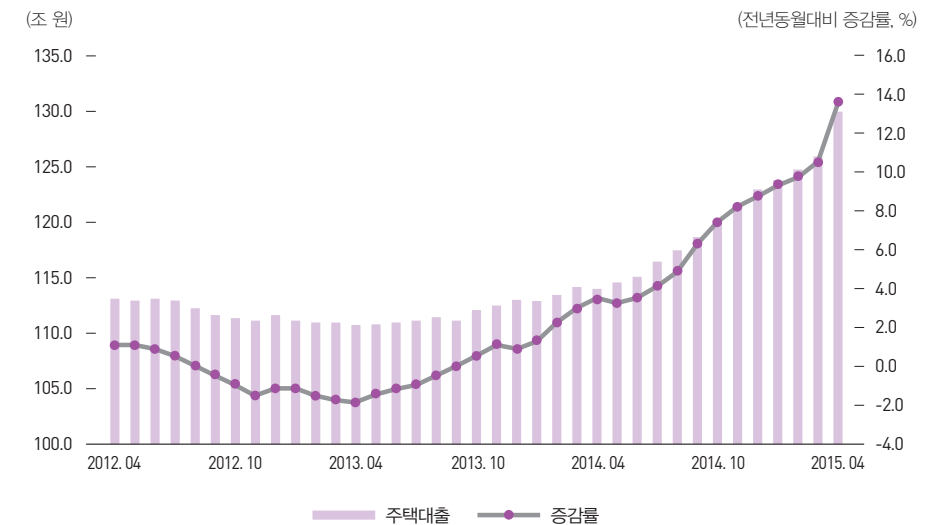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4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 은행 가계대출(195조 8,371억 원)은 전월(192조 7,218억 원) 대비 1.6%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30조 2,561억 원)은 전월 대비 2.3%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66.5%를 차지



주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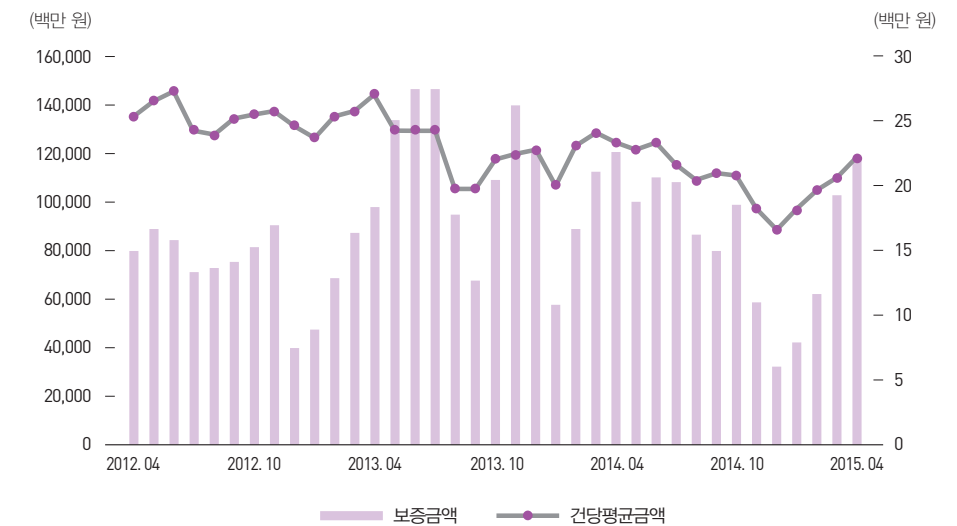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경제동향 | 금융

신용보증

서울의 4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 전월 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218억 원 / 5,299건
-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13.8%, 6.6% 증가, 건당 평균 지원 금액 (2천 3백만 원)은 전월 대비 7.0%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1.4% 감소, 2.2%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3.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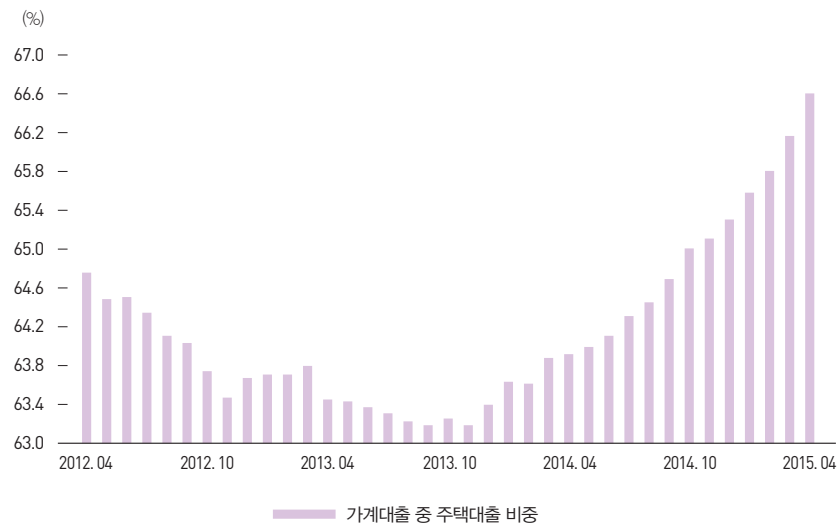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 금액 추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전 업종에서 보증금액 전월 대비 증가

-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456.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22.4% 증가. 전체 보증금액 중 도·소매업 보증지원비중은 전월 대비 2.6%p 상승한 37.5%
- 제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88.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였으나 전월 보다는 4.1% 증가. 전체 보증금액 중 제조업 보증지원비중은 7.2%로 전월 대비 0.7%p 하락
- 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 전월 대비 5.3% 증가한 268억 원
- 도소매업 보증지원건수는 1,899건이며 제조업 보증지원건수는 31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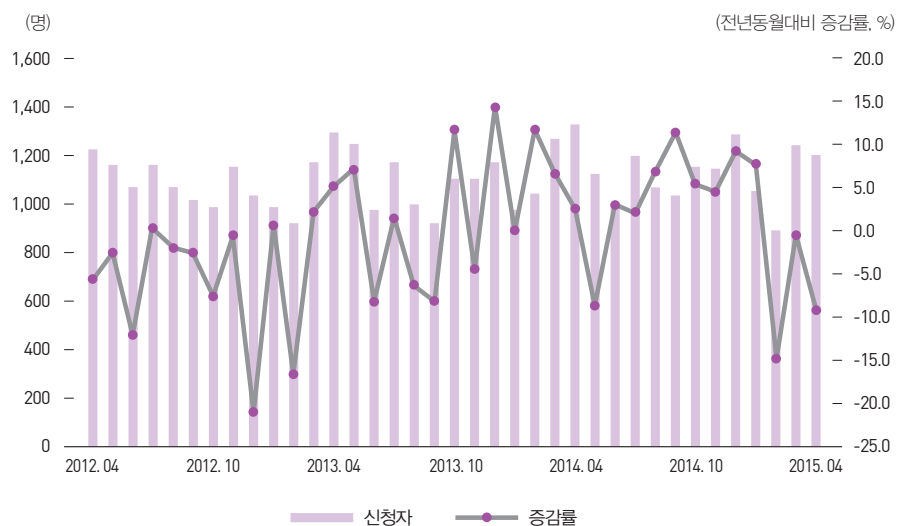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

- 서울의 4월 개인파산 신청자(1,222명)는 전월(1,259명) 대비 2.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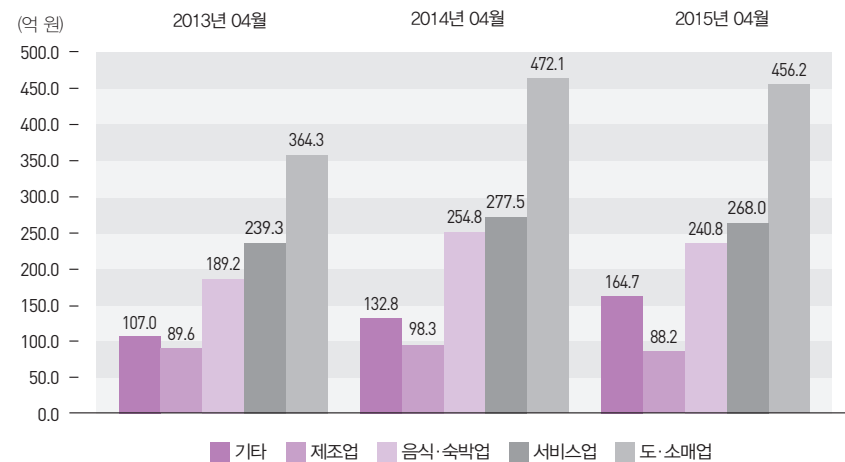
자료 대법원

〈그림〉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경제동향 |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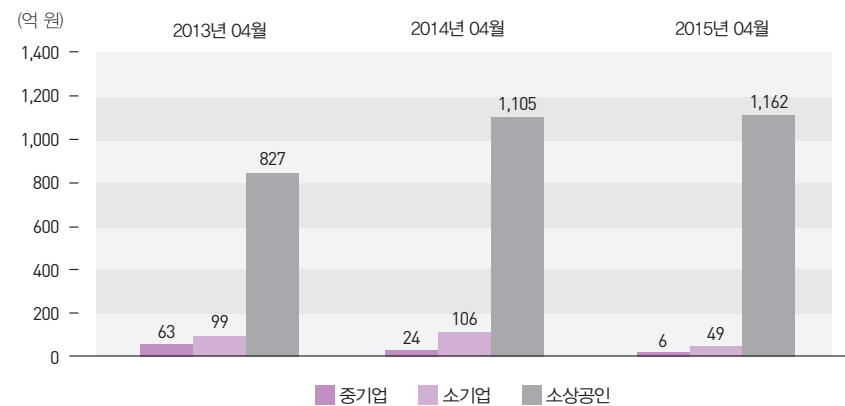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 지원 건수 전월 대비 증가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1%, 전월 대비 14.2% 증가한 1,162억 원으로, 전체보증금액의 95.4%를 차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건수는 5,189건으로 전체 보증의 97.9%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3.2% 감소, 전월 대비 13.8% 증가한 49.4억 원으로 전체보증금액의 4.1%를 차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1.9%인 101건
-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74.9%, 전월 대비 33.7% 감소한 6.1억 원으로 이는 전체보증금액의 0.5%를 차지. 중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0.2%인 9건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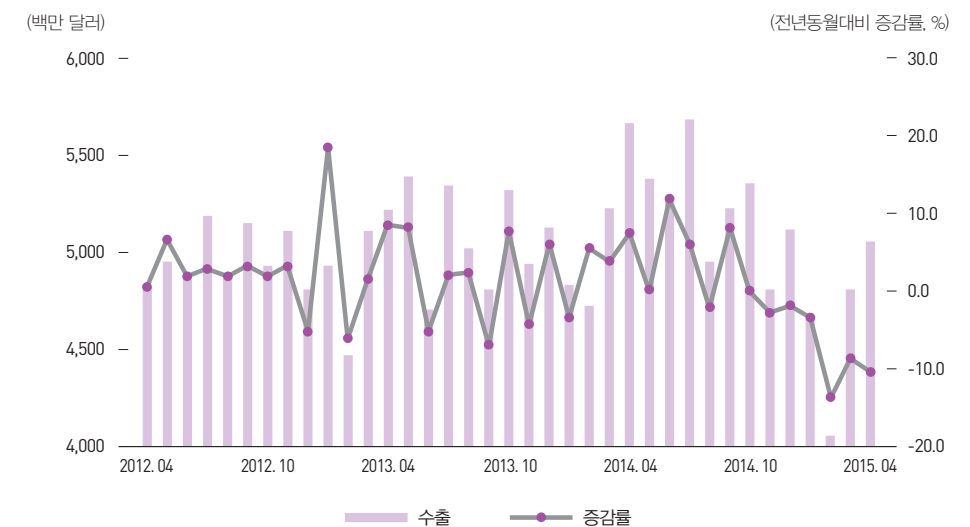
수출입

서울의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하였고, 수입은 12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62.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하였고, 수입은 377.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7.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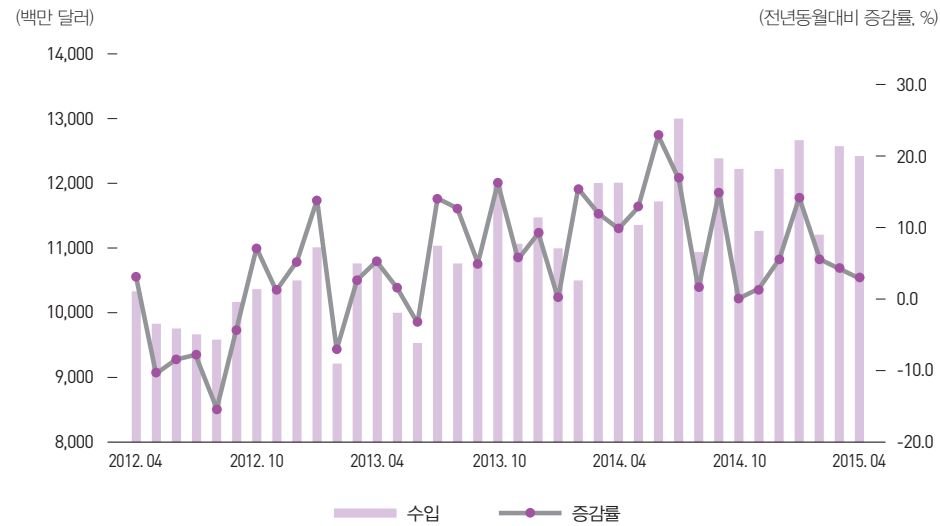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원유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이 517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석유제품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1,042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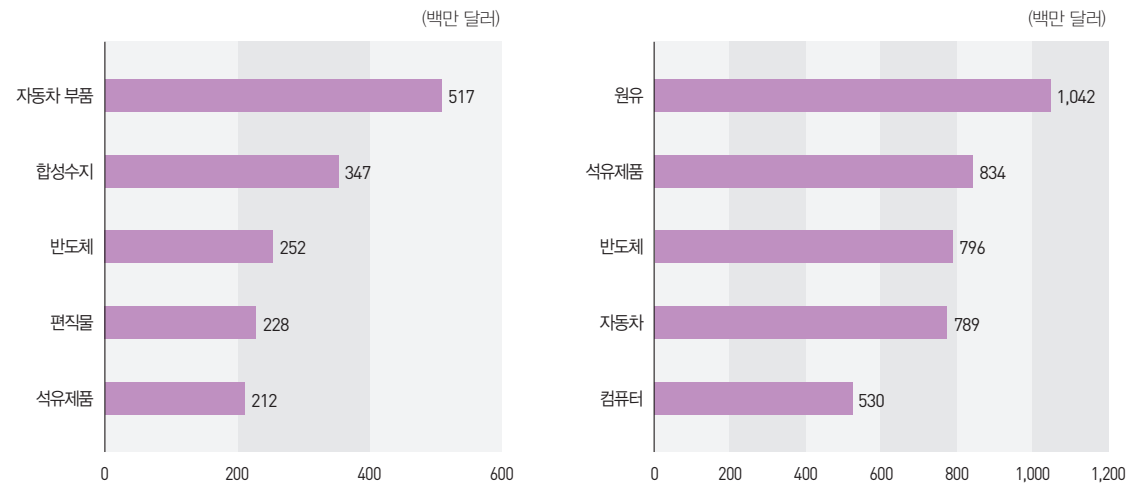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무역협회

〈그림〉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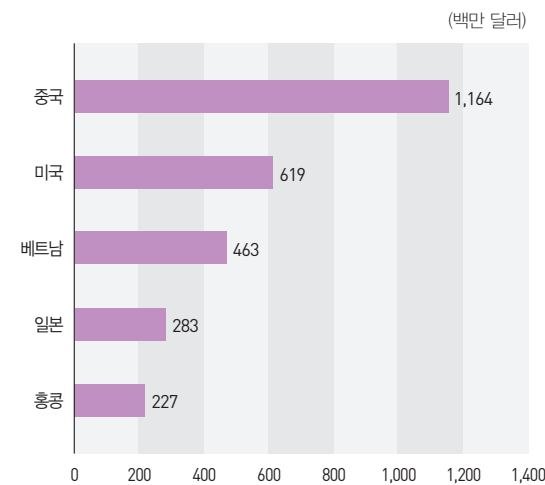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4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4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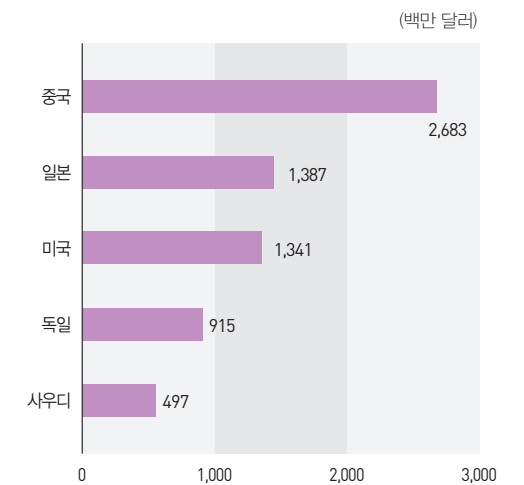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수출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27.9% 감소한 1,164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홍콩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한편,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정부의 내수산업 육성 정책, 중국 기업의 기술력 상승,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중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2,68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순
- 원유 수입 증가에 따라 대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76.4%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외제차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어 꾸준히 상승 중



자료 무역협회

〈그림〉4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4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자료출처

자료출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4월 서울시 고용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 관세청, 『2015년 4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 국민은행연구소, 『2015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부동산114, 『2015년 4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 중소기업청, 『2015년 4월 중 신설법인 동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 통계청, 『2015년 4월 산업활동동향』
- 통계청, 『2015년 4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1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 한국은행, 『2015년 4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 한국은행, 『2015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경제통통

FOCUS

- “일자리 끝까지 찾아준다”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혁신
-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

ZOOM IN

- “서울광장서 도시농업체험을”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HOT ISSUE

- “우리 마을은 시네마 천국” 도서관·문화회관 영화관으로 변신
- 투자·교육·멘토링 창업 전문가 100인, 성공 창업지원 첫 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 01

“일자리 끝까지 찾아준다”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혁신

서울시, 모든 시민에
맞춤형 밀착지원·
시민 체감 일자리
종합센터로 혁신

서울시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적의 일자리서비스 종합센터로 진화한다.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베이비부머’ 등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시민의 취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이 센터의 핵심이다.

첫째, 일자리 관련 기관과 정보 시스템을 일자리플러스센터 중심으로 통합해 서울시 내 구인·구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관리·지원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들 간의 연계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 등의 우수 인력 풀을 확보한다. 또한, 이들이 고용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사가 상담-알선-교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 셋째,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방문을 대학 캠퍼스로까지 확대하고, 채용 기회를 높이기 위해 구인 업체와 청년들의 만남의 자리도 늘리는 등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유기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미스매칭을 막고 꼼꼼한 취업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공일자리 및 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 연계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혁신을 통해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등 시민 누구나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취업지원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함께서울 | 일자리정책과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FOCUS | 02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실내건축업면허가 없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250만 원을 수령했으나, 시공업체에 4,100만 원만 지급하고 6,150만 원은 본사가 챙겼다. 또한, 주방기기·설비 공급 시에도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 원을 받고 주방기기업체에는 5,000만 원만 지급했다.
- ▶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공사비용으로 2억 1,795만 원을 지불했으나, 시공업체가 본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거와 가벽 공사만 하고 공사를 포기했다. 추가 공사비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새로운 업체를 공사에 투입했으나 도면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공사도 지연돼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오픈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92개 가맹본사에 소속된 서울시 내 1,933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테리어공사 계약체결방법〉 조사에서는 본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또는 본사 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62.2%로 대부분이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본사 또는 본사 지정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시 평균 공사비용은 3.3㎡당 약 309만 원이었으나,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평균 공사비가 약 174만 원으로 43.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공사 만족도〉는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가 7.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6.02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맹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 강요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응답 가맹점주 921명 중 154명(16.7%)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및 가맹점주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공정피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가맹본사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행정기관에 개정건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 국번 없이 120)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서울 | 소상공인지원과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ZOOM IN | 01

“서울광장서 도시농업체험을”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나홀간 서울광장이 ‘도시농업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6월 4일(목)~6월 7일(일) 4일간 서울광장에서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을 주제로 「제4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을 제시해 시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는 <도시농업 전시관>과 도시농업의 미래를 알아보는 <학술 대회>, 그리고 도시농업경진대회 등의 <부대 행사>, 씨앗·모종 <나눔 행사>로 구성·진행됐다.

<도시농업 전시관>에서는 가정 내 베란다, 주방을 식물과 같이 연출하고 이곳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과 시민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텃밭 조성 및 작물 재배 방법 등을 소개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과 기술 융합 사례, 도시농업 앱 존 등 도시농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 산업관’과 도시농업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농업관’ 등 볼거리가 풍부했다.

서울 지형을 축소한 텃밭도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울광장 주변에 마련되는 이 텃밭은 △엄마의 베란다 텃밭 △아빠의 오피스 가드닝 △막내딸의 스쿨 팜 △할머니의 싱싱 텃밭 △마을의 나눔 텃밭 등의 이름을 붙여 구역을 나누고 ‘동북권 배’, ‘동남권 꾸지뽕’, ‘서북권 고추’, ‘서남권 벼’, ‘도심권 약초’ 등 권역별 대표 작물을 심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박람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힐링과 나눔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공동체 회복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체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OT ISSUE | 01

“우리 마을은 시네마 천국” 도서관·문화회관 영화관으로 변신



숨 가쁜 도시생활 속 가족·세대·이웃 간 소통과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집 근처 도서관, 청소년 회관, 문화 회관이 ‘마을 극장’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이웃과 함께 우수 영화와 독립 영화 등을 관람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영화와 함께 하는 우리 마을 소극장’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우리 마을 소극장’은 우선 △성동 구립도서관 △동대문 답십리촬영소 △은평 증산 정보도서관 △서대문 문화회관 △관악 청소년회관 △도봉 구민회관 등 6개소에서 주 1회 영화를 상영하고, 시민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해 2018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마을 소극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영화 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고, 감독·작가 등 영화관계자를 초청해 영화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며, 주민을 위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장으로까지 활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반 상영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청각 장애인용 한국어 자막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해설을 추가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영화와 우수한 작품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영관을 찾기 힘들었던 한국 독립 영화 등도 정기적으로 상영한다.

더불어 영화에 관심 있는 주민을 모집해 영화에 대한 기본교육 등을 진행한 후 상영 작품 안내 등 소극장 운영에 참여하는 ‘소극장 지기’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영 작품 및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 문화 포털(<http://culture.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02-2133-2592)로 문의하면 된다.

HOT ISSUE | 02

투자·교육·멘토링 창업 전문가 100인, 성공 창업지원 첫 발

“중국 시장 진출 성공 경험과 비법을 서울의 예비 창업 기업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 창업 센터 입주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2년 반 만에 100억 원의 매출 신화를 달성한 ‘제이애플 인터내셔널’ 심재성 대표는 서울창업포럼 일원으로서 역할을 위와 같이 밝혔다.

창업·마케팅·투자 전문가부터 성공 창업가까지 100명의 창업 전문가가 ‘서울시 창업 정책 멘토’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100인의 서울창업 포럼」 출범

6월 3일, 서울시는 기존의 창업 교육, 공간 및 보조금 지원 등에만 치중해 왔던 일률적·분산적 창업지원 정책을 넘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인 혁신형 기업 창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창업지원기관 협의체인 ‘100인의 서울창업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100인의 서울창업포럼’은 창업지원 기관장(34인), 학계 전문가(14인), 마케팅 전문가(19인), 투자사(10인), 창업 미디어 관련 분야 등(10인)과 실제 창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성공 창업가(13인)로 구성됐다.

이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단지 명목상 전문가 협의체가 아닌 정책 연구와 멘토링 기능을 확대해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창업 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 포럼은 6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브랜드 △교육 △투자 △지원 사업 △마케팅 5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최종 제안 내용을 제출하며, 11월에는 분야별 성과를 상호 평가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외에도 포럼의 활동 성과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관·학계가 협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는 조금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